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추천사, 6장, 닫는글



김경진

Korean PDF edition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김경진 AI서재 온라인 도서. 성장 과정, 과학기술 의정활동, 의원외교, 입법 투쟁, 동대문 비전, 대한민국 인구절벽 해법을 담았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추천사

1장 김경진이 김경진 되기

2장 과학적 의정생활

3장 세계는 넓었고, 배울 것은 많았다

4장 입법 투쟁기

5장 동대문 개조계획

6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닫는글

들어가는 글

전체 목차 보기

정치에 입문한 이후, 여러 선거를 치렀다. 내가 출마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참모, 지방선거 유세 지원 등. 매번 선거 때마다 그즈음에 문제가 되는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 동반성장, 노동자 보호, 복지, 건강보험 확대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 2024년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다. 2023년 1년 신생아 26만 명, 20년 후 군입대

할 병력자원은 13만 명에 불과하다. 건강여부와 상관없이 100% 다 군에 간다고 하더라도 13만 명이다. 전국 대도시에 있는 그 많은 건물, 빌딩과 아파트는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수명이 100세에 육박함에 따라, 천만 명이 넘어갈 노인들의 건강 관리, 영양과 부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후 노동인구 1인당 평균 1년에 2-3억은 벌어야만 국가 유지에 필요한 세수, 재원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성공적 번영과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추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체계적 국가 구조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국가가 망할지도 모르는 절벽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그런데도 정치는 그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169석의 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당대표로 야당을 지휘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는 철 지난 이념논쟁의 불이나 당길 생각을 하고 있다.

나의 과거의 삶, 20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자랑, 내가 생각하는 국가 운영의 방향, 내가 생각하는 인구절벽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 책을 썼다. 국가를 경영하고 싶은 내 의지를 담아. 도움을 준 환타 전명윤 선생, 그리고 항상 내 옆에서 조용히 정치역정을 도와준 이재교 친구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2023.11

전체 목차 보기

추천사

전체 목차 보기

홀로 검사 생활할 때 맥주잔에 소주 한잔 짧게 마시고 잠들었던 얘기가 들었지, 어려서부터 과학에 관심 많았다는 건 이번 책의 원고를 보고서야 알았다. 과학자가 꿈이었다가 아버님의 권유로 법대에 가서 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었단다. 국회 청문회 등에서 부드러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실제 국회 상임위에선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인간의 존엄을 증진시키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과학의 힘이 기여했다고 김경진 위원장은 이 책에서 주장한다. 그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밝힌다. '동방의 등불'이 되어 세계의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세계사적 족적을 남기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그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지역구 활동의 무대를 광주에서 서울 동대문으로 옮겼다. 극단의 진영정치로 비난받는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그는 이번에 그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정당 소속이다. 그의 정치활동 동기가 더 실현되는 무대가 되어야 할 터이다. 천동설과 지동설 논란에서 지동설이 확인되었듯이, 김경진의 행보가 올곧은 길이었음을 증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흠

대한민국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선진국의 문턱에 있거나 이미 진입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인적자본의 축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추락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와 정치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이러한 사안을 심도있게 고민하는 몇

안 되는 정치가 중의 한 명임이 드러나 있다. 일반 대중에게는 청문회와 TV 대담 프로를 통해서 인간적이고 소박하면서도 입담 좋은 정치가로만 알려진 그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및 국방 분야에서 대단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그는 과학기술 혁신본부 창설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고 「한·미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라는 인간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혜안으로 '동방의 등불'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필형 구청장과 함께 '그랜드 청량 마켓몰'을 구상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서울대학교 교수 황농문

김경진 당협위원장님의 신작을 읽으며 그분의 뚜렷한 비전과 실행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활동은 많은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은 김경진 의원님이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가치와 그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 책을 통해, 김경진 당협위원장님의 전방위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분의 철학과 국민과의 소통에 대

한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과 그분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어, 모든 독자에게 깊은 인상과 통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국민 각자의 삶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김경진 당협위원장님은 이러한 비전을 깊게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Gist 인공지능 연구소장 공덕조

전체 목차 보기

1장 김경진이 김경진 되기

전체 목차 보기

1966년

나는 1965년생이다. 그해, 대한민국 1인당 GDP는 130달러 내외였다. 1달러에 270원 정도였으니, 원화로 3만 6천원 정도다. 국민 한 명의 1년 총소득이 3만 6천원이던 모두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전남 장성 시골에서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났다. 내 고향 장성은 내가 태어나던 해인 1965년 인구가 약 13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살아가면서 내 고향을 낙후된 시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태어나던 해 내 고향은 유사이래 가장 인구가 많았던, 어쩌면 전성기였다. 시골집은 아궁이에 나무를 때 무쇠솥으로 밥을 짓

던 그 시절의 전형적인 시골 모습이었다. 전기도 중학교 무렵 들어왔다. 장남이었고, 어릴 적부터 두뇌와 재능을 인정받았다. 당시엔 온 가족이 될성싶은 나무에 집중 투자하던 시절이었다. 모든 자식들을 골고루 공부를 시키기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형제들 중 선택받았다. 공부는 계층이동에 필수적인 사다리였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시골을 떠나 광주학교로 전학했다. 4학년 때부터 광주 작은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집은 가난했지만, 나는 그 가난에서도 어느 정도 열외와 특권대우를 받았다.

장성보다 상대적으로 대처였던 광주의 국민학교엔 책이 많았다. 그 즈음 독서의 기쁨을 처음 알았다. 탐정소설과 모험소설, 그리고 과학책을 주로 읽었다. 언젠가 읽었던 아라비안나이트에 등장하는 '사막'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읽어도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았다. 모래만 있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 바닷가라도 데려갔다면 모래사장을 보

면서 감을 잡았을까? 아니 TV를 통해 한 번이라도 그 광경을 봤다면 금세 이해했을지도 모르나, 글자만으로는 상상하는 사막은 막막하기만 했다. 동굴도 알았고, 열려라 참깨도 왜 굳이 참깨라고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적당히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사막이라는 말은 그 후로도 한참 수수께끼.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난 사막이라는 존재에 대해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딱 그때쯤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SF의 시대가 열렸다. 1976년 여름 방학을 맞아 '로봇 태권브이'가 등장했다. 그전까지 흥길동같은 동화 기반의 극장용 만화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대 로봇 물은 생전 처음이었다. 전파사 앞에서 듣는 라디오에서는 장안의 화제라며 '태권V' 이야기를 했다. 개봉 초기 태권V는 서울의 대한극장과 세기극장에서 상영했다. 선착순 200명에게 문화연필을 준다는 광고를 매일같이 들었다. 영화 관람료는 300원. 짜장면 몇 그릇 값이었다. 시간이 지나 광주 중앙극장에서도 상영을

시작했다. 이 영화를 직접 보고 싶은 욕망만 간절했다. 개학 날 아이들은 세 유형으로 나뉘었다. 서울에 친척이 있어 대한극장에서 태권V를 본 아이들과 광주 중앙극장에서 본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 보지 못한 아이들. 그 시절은 모두 가난할 때라 나 같은 아이들이 제일 흔했다. 뒷줄의 몇몇 친구들은 그런게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때 그런 시절이었다. 비록 거대 로봇은 없었지만, 왕잠자리는 도심 여기저기 흔하던 시절, 애꿎은 잠자리에게 화풀이를 다 했던 것 같다.

무진(武珍), 무진(霧津), 무진(無盡)

그 시절 시골에서 변화란 계절이 바뀌는데 따른 자연의 변화뿐이다. 그런 장성에서 도심 광주로 올라오니 모든 것이 새로웠다. 초등학교 때야 그래도 집과 학교를 오갔지만, 중학생이 되자 머리가 커졌고 용기가 생겨 변화한 도심 시내를 쏘다니는 게 즐거움이 되었다. 매일 거리를 누비며 공부와는 담을 쌓았다. 유학을 보내주고 생활비를 대주시는 부모님께서는 죄송한 일이지만 시골에서 살던 중학생에게 도시는 언제나 새로움과 놀라움이 있는 유혹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에 무진(武珍)중학교를 다녔다. 광주의 옛 이름이 무진주였기에 거기서 딴 이름이다. 중학교 시절, 나는 만화에 푹 빠져 살았다. 주로 과학만화와 추리만화를 즐겨봤다.

당시는 명랑만화라는 장르가 대세였다. 길창덕, 박수동, 윤승운, 신문수 같은 작가들이 그 시대를 풍미했고, 스포츠 만화를 그리던 이상무의 '독고탁'도 기억난다. 지금은 만화가 지식, 생각, 오락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는 지금과 달리 만화방을 들락거리는 건 불량 학생들이 하는 일종의 탈선 행위로 취급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빠진 만화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다. 만화책은 동화책과는 다른, 아니 동화책은 차마 상상하지 못하는 파격을 내게 선사했다. 새소년이라는 잡지에 연재하던 방학기 작가의 '사라진 낡은 집'은 전형적인 추리물이었다.

'타임머신'이나 '태양을 훔친 소년', '초인 루팡' 등은 지금도 어렵פות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품이다. 특히 타임머신은 요즘말로 '대체 역사물 장르'의 초창기 작품이다. 제1화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이다.

정말 땀을 쥐며 봤다. 나

라면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게, 어찌했을까를 상상했다. 상상만으로도 코에 땀이 찔고 타임머신으로 바라본 미래는 놀랍고 흥미로웠다. 그 시절 나에게 만화는 온통 세상 그 자체였다.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전자오락실도 신세계였다. 당시 오락실 게임은 흑백 스크린에 셀로판 비닐을 붙여 약간의 칼라를 구현했었다. 갤러그 같은 몇 색으로 이루어진 화면이 나오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 내가 본 게임은 녹색뿐인 단색이었다. 지금과 같은 HDR과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하는 3D 오픈 월드는 상상도 못 하던 시절이었다. 오락실을 갔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전투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이 만든 세계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자오락은 내가 직접 조종해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과 싸울 수 있었다. 쉽게 말해 내 집중과 능력에 따라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

만화방과 오락실을 출입하면서 그 전에 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당시 내가 돈을 구할 길은 참고서를 산다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뿐이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만화와 전자오락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컸다. 내가 그 당시 달성한 '스페이스 인베이터' 최고점수는 한동안 깨지지 않았다.

1980년 고등학생이 되자 이제 놀 만큼 놀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현실이 짓누르기 시작했다. 사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적 재능이었을 테니 그건 당연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내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말없이 내줬다. 없는 형편임에도 참고서 살 돈을 미룬 적은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간 애써 무시했던 죄송함이 밀려왔다. 그길로 무진(霧津), 안개와도

같은 방향을 끝냈다. 친구 한일권과 오중섭이 1980년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서울로 대학을 가자. 거긴 광주보다 더 크다. 더 많은 세상이 열려있을 것이다. 그 소리가 벼락 같이 들렸다. 요즈음은 전화연락도 거의 끊겼지만 마음속의 우정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나에게 베풀어준 우정은 무진(無盡), 끝이 없었다. 중학 시절, 나는 세 가지의 다른 무진을 만났던 것일까?

내 꿈은 천체물리학자

중학생 시절,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정확히는 만화에서 보았던, 은하계를 탐험하는 천체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장성집에선 양잠을 했다. 당시 일차산업이 주력이다 보니 한국은 별다른 수출품이랄 것이 없었다.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당시 농촌 수익사업으로 양잠을 권장했다. 뽕나무를 무상으로 나눠줬고, 누에고치를 국가가 수매했다. 국가 수매는 적어도 판매는 보장이 된다. 그렇게 우리 집은 누에를 쳤고, 뽕나무밭 한가운데로 이사를 해야했기에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다. 당시 읍내는 전기가 들어왔지만, 우리집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해가 떨어지면 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초등학생이던 나는 별을 바라보며 사색하고 몽상하고 망상했다. 부모님은 종종 하늘만 바라보는 어린 나를 걱정했지만, 몽상을 멈출 수는 없었다. 저 반짝이는 별세계 건너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아이들이야 수많은 배경지식으로 별과 성간, 행성을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때는 책도 흔치 않던 시절. 지식의 빈 공간은 항상 상상력이 비집고 들어왔다. 미지는 나를 매료했다. 중학생 시절에도, 고등학생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오리온자리 한가운데 삼태성을 보면 가슴이 쿵쿵 뛴다.

1960년대 후반 인류가 달에 착륙했다. 나중에 인류가 달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이야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 걸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당시엔 TV가 있다해도 중개방송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생방송 화면이 위성을 통해 태평양을 넘어와야 하는데, 당시 한국에는 그런 설비 자체가 없었다. 미 대사관에서 장비를 공수해 청와대를 비롯한 극소수의 제한된 고위층만이 암스트롱이 달을 밟는 장면을 지직거리는 화면으로나마 봤다 한다.

참고로 당시 아폴로 달착륙을 생중계로 볼 수 있던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필리핀뿐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때 아이들은 달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희망과 꿈을 동시에 가졌다. 그전까진 장래 희망이 장군과 대통령뿐이던 나라에서 과학자로 갈아타는 아이들이 쏟아졌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천문학도의 꿈을 꾸고 있는 나는 작은아버지를 졸라서 천체망원경을 구입했다. 당시 집안 사정으로는, 아니 어지간한 살림살이를 과시하는 집조차 거액에 속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는 망설이고 망설이다 천체망원경을 사들고 오셨다. 서울에 와서, 가격을 알아보고는 한숨 한 번

쉬고, 꼭 필요하냐 묻고 다시 한 번 발품 팔기를 서너 번 한끝의 결단이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과 천체망원경, 그리고 GPS가 연동해 별이나 성간의 이름만 입력하면 끝인 시대지만, 그때는 모든 걸 수동으로 해야 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 본체 위에 자그마한 꼬마 직사망원경이 부착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조차 천체망원경을 신기해 하셨다.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았지만, 내가 망원경을 통해 본 우주는 달 표면 크레이터와 토성 고리, 목성 정도였다. 참고할 책도 없었고, 체계적인 배움도 없었던 고등학생 시절 내가 우주에 다가간 모습이었다.

참고로 한국의 천문학 역사를 보면, 학술단체인 한국 천문학회가 처음 생긴 게 1965년, 1972년에야 한국 아마추어 천문가 클럽이 탄생했다. 아마추어라고는 하지만, 작고한 조경철 박사가 축사를 했고, 회장은 과학세계사라는 출판사 사장님이었다고 한다. 시골 고등학생이 범접할 아마추어도 아니었던 셈이다.

법대로 가는 길

평생 농부로 살았던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국민학교 2학년 중퇴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person 중 제일 총명(聰明)한 분이다. 총(聰)이란 귀가 밝아서 세상의 어떤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명(明)이란 눈이 밝아서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본다는 의미다. 학력과 지식은 없지만 세상의 이치와 돌아가는 사정만큼은 순식간에 파악하시는 분이시라, 종종 참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언젠가 면사무소를 방문해 불공평한 대우에 항의하면서 공정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공무원의 폭행이었다. 지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시골 공무

원의 위세는 대단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 무식한 농민 따위가 의견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가소로웠던 것 같다.

아버지와 집안의 나에 대한 기대는 법대 진학이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나 검사가 된다는 것은, 본인의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집안 전체의 영광이자 위세였던 시절이었다. 아버지의 판사·검사에 대한 기대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의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과를 선택해서 수학2, 물리2, 화학2를 공부했다. 아버지도 아쉬워했지만 티를 내진 않았다. 나도 알았다.

아버지의 염원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고3, 학력고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학과 선택해야 하던 그때. 그로 인해 내 인생의 궤도가 확정돼야 하는 그 시간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꿈과 현실이 처음으로 짓눌러왔다. 고3 까까머리 소년이었던 김경진은 고민 끝에 결국 법대에 원서를 넣었다. 다행히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천체물리학자가 검사, 정치인으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인생의 경로는 항상 중첩되고, 경험은 소멸되지 않는 법. 20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활약했고,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와 협업을 하고 있다.

고교 시절 이과 공부를 한 경험, 그리고 여전히 과학기술에 관심의 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인생에서 버려지는 경험은 없다.

서울생활 1983년 2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서울 생활이 시작됐다. 지방에서 올라온 나에게 종로·광화문의 풍경은 화려했다. 지금이야 한강 이남이 더 화려한 시대지만, 이때는 막 잠실이 자리를 잡고, 둔촌동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며 소위 강남이 만들어지고, 송파가 생겨나는, 그래서 아직 강북의 도심들도 서울의 중심임을 뽐낼 수 있었다. 신입생 시절, 안암동, 제기동은 내 놀이터였다. 백화점에서는 미국에서 수입된 비닐에 싸인 치즈라는 것을 처음 보았다. 처음에 입에 넣고는 왜 비누 같은 걸 먹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게 지금 떡볶이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다. 책을 좋아하는 내게 교보문고와 종로서적의 규모는 볼 때마다 놀라웠다.

극장도 즐겨 찾던 곳이었다. 오스카 극장은 개봉관이었고, 그 건너편에 시대 극장이 있었다. 입학하고 한 달쯤 후쯤, 우연히 오스카 극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영화관 간판의 카피 문구에 꽂히고 말았다.

소련 미모의 톱스타 '류드밀라 사베리야바'의 명연기!

소련? 호기심이 밀려왔다. 반공이 서슬 퍼렇던 시절, 소련은 입 밖에 꺼내기도 두려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고, 금기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2차 대전 당시 나폴리의 시골처녀 소피아 로렌과 밀라노 청년 안니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둘은 전쟁의 와중에 사랑을 나눴고, 남자는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떠나게 되지만 얼마 안 가 전사하고, 소

피아 로렌의 두 손엔 전사 통지서가 놓이게 된다. 하지만 소피아 로렌은 남편의 죽음을 믿지 않고 소련 (정확히는 우크라이나)으로 가 남편을 찾아 헤맨다. 그 넓은 땅을.

이윽고 그녀는 남편을 찾아내지만, 남편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이미 다른 여자와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 상태였다. 실망한 그녀 또한 이탈리아로 돌아와 나이 든 노동자와 결혼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억을 되찾은 남자가 그녀를 찾아온다.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몸, 결국 사랑하는 남자를 기차역에서 떠나보내고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서울 생활 초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서울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광경이었다. 지금에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때만 해도 가난하던 시절이라, 적어도 고기만을 구워먹는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고기가 귀하기도 했지만, 고길 구하면 최대한 늘려 먹어야 했기에 무, 두부와 함께 국물 형태로 고기를 조리해 먹었다. 그 또한 일 년에 단 몇 차례에 불

과한 연례행사였다. 그런데, 그 귀한 고기를 서울 사람들은 불판에 구워 먹었다. 그 사실이 당시의 나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하, 서울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라는게 당시의 내 총평이었다. 그땐 그런 서울의 모습이 세상 화려함의 전부와 같았다.

전체 목차 보기

2장 과학적 의정생활

전체 목차 보기

과학과 국방

과학은 곧 국방이고, 국방은 곧 과학이다. 이 둘은 불가분이다. 최첨단의 과학기술은 군사 부문에서 먼저 쓰였고, 군사 부문의 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넘어와 연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냈다.

한때 자동차마다 '도로교통 척척박사'라는 지도책을 비치하고 있었다. 그때는 길을 가다 모르겠다 싶으면, 차를 갓길에 대고 지도책을 찾아보거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걸린 틈을 타 운전석 문을 내리고 택시 기사에게 물었다. 택시 기사님은 길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일종의 휴먼 네비게이션이었다. 길을 물으면 "가만있자. 일로 쪽 가지요? 가면 횡단보도가

보자...아 세 개구나. 쪽 가세요. 그냥 그러다 세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가면 왼쪽에 보일 거예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그런가, 그 당시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돕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자연스레 공유하는 그런 관계였다.

해외여행을 갈 때도 큼지막한 여행안내서가 필수였다. 매번 갈 때마다 책이 맞네 안 맞네, 지도가 틀리네 축적이 이상하네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여행안내서 한 권은 반드시 챙겨갔다.

아날로그 지도책 세상을 뒤바꾼 것은, 군사용 기술인 GPS를 민간에게 개방한 1996년부터다. 물론 당시에는 GPS가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큼 작지 않았다. 1978년도에 찍은 사진을 보면 GPS 신호를 수신받기 위해 크고 두꺼운 안테나가 부착된 배낭을 지고 다녀야 했다. 휴대 가능한 GPS 수신기가 처음 나온 건 1989년인데, 이때만 해도 GPS 단말기는 무게만 680

그램, AA 배터리를 네 개나 넣었는데 작동시간은 3~4시간에 불과했다.

우주개발 과정에서 탄생해 미사일 유도장치에 들어가던 GPS가 민간에 개방되며 세상은 획기적으로 변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길을 외우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다. 길치들이 일제히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GPS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일종의 축복 같은 거였다.

이제 해외여행은 아예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 손바닥 안에서 지도가 열리고, 지도의 특정 장소를 클릭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쓴 경험담이 나온다. 초반의 스마트폰은 GPS 신호만 수신했기에 고층 건물이나 많은 지역에서는 종종 오차가 나기도 했지만, 요새 스마트폰은, 러시아 버전의 GPS인 글로나스, EU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도 모두 통합 수신해 오차를 보정한다.

이제 길 몰라 어디 못 간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집집마다 쓰는 전자레인지도 레이더 개발 기업인 레이시온이 전자파를 연구하다 발견한 현상을 응용해 만들었다. 컴퓨터도 애초 유도탄의 탄도각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시초였고, 인터넷은 1969년 미국이 군사 암호통신 용도로 개발한 알파넷이, 민간 연구기관에서 응용하면서 이전됐고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인터넷 혁명으로 발전했다. 사실 그 모든 기술, 컴퓨터와 GPS 그리고 인터넷이 결합된 장비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지금 당신이 손에 쥔 그것 말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더이상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을 선도하고 압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국방이 곧 과학이고, 과학이 곧 국방인 시대다. 이 둘은 맞물리며 굴러간다. 한국이 만든 반도체가 없다면 첨단 미사일 개발부터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개발도 무망한 일이다. 현재 한국의 기술적 독립, 혹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우리의

피와 땀의 성과다.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에 대해 한국인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나라는 없다.

자주국가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세계에 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확보며, 이를 위한 과학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아직도 국가는 R&D 부문에 있어 교통정리를 해야 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과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 이 명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를 하다

한때나마 과학도의 꿈을 꾀 탓에, 가끔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은 문과 출신이라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거니와, 개인적으로 검사라는 전직이 있다 보니, 블록체인, 인공지능, 유전자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016년 국회의원이 되고 상임위로 과학방송위원회를 선택해 4년 내내 과방위에서 일한 이유도, 과학기술만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강연을 할 때마다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항상 설파한다. 방송에서 보았던 날카로운

정치평론을 예상하고 있던 청중들에게, 강의 내내 첨단기술 이야기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2018년 2월의 일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즉 KAIST의 졸업식 축사를 부탁받았다.

한때 과학자가 꿈이었던 사람으로서, 이걸 뭔가 뿌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한 분야에 심취한 사람을 덕후라고 부른다. 일본어 오타쿠 オタク에서 파생된 말인데, 취미 이상으로 몰입해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진 비전문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성덕에서 성(成)은 이룰 성이다. 즉 과학도의 꿈을 가졌으나 이루지 못한 과학 애호가에게 카이스트에서 졸업 축사를 부탁했다는 건 아무튼 과학계로부터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당시 축사의 일부를 발췌해본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대학 83학번인데요. 이렇게 학위수여식, 졸업식에 올 때마다 제가 졸업한 1987년의 감회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 아들

도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되는 사람만이 국가, 인류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시간 부족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인이 되면 잉여시간을 찾아내고 이 잉여시간을 생산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비네는 “제일 많이 바쁜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뇌를 가지고 있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으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의 뇌를 가지고,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고밀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고밀도로 사용하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말입

니다.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오랜 시간을 한 가지 일에 매진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의 신화 스티브 잡스는 불교의 수행법의 하나인 선(禪) 수행, 다시 말해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는 명상을 통해 삶의 본질과 깨달음을 추구했던 혁신가이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통해 늘 ‘집중과 단순함’을 주문했는데요. 저는 잡스의 창의력과 통찰력의 배경이 첨단기술이 아닌 명상을 통한 내면의 성찰에 있었다고 봅니다. 기도, 명상, 묵상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스님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한 답변으로 늘 “행복은 마음가짐에 있다.”는 큰 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겨 자격지심만 키우게 됩니다.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은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운전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자만이 시간의 주인,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국회의원 김경진

학위수여식 이후, 상찬을 많이 받았다. 정치인의 상투적인 축사가 아닌 진정성을 기반으로 큰 울림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연설이 꽤 괜찮았는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카이스트 졸업식 초청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과학 인재들 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기회를 얻거꾸 가지게 된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고 있을까?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들이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연구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게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으니까.

포털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포털들은 항상 뉴스 배열의 공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다. 특정 정파와 가까우니, 편파적인지 여부는 항상 논쟁거리다. 모두가 피해의식에 휩싸여 상대방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포털이 어떻게 뉴스를 배치하느냐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도 그럴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고, 쇼핑하고, 사람과 교류한다. SNS의 시대가 열리며 포털이 운영하는 카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의 힘은 약화되었지만, 대신 하나둘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이들은 케이블의 쇼핑 채

널도 흡수하는 중이다. 포털의 힘은 여전하며 한국에서는 ‘공공재’의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이제는 옛일처럼 들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포털은 개인의 신원을 인증해주며 국가 업무를 사실상 대행했다. 물론 그 정신없던 시기 포털의 서버망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행정을 만들어낸 건 일견 잘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수많은 행정업무가 포털에 의해 공급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령층은 일종의 행정 사각 상태에 놓여 있었다. 실제로 당시 모든 개인은 수기로 신원을 작성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큐알코드를 찍어야 식당에 갈 수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수

기는 사라졌으며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못하는 단독의 노인들은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항의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가려 해도 그곳조차 큐알을 찍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 말

이다.

이러다 보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포털은 공공의 영역인지, 혹은 사기업에 불과한지조차궁금한 상황이 이어졌다. 국가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에 일임하는 게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또 이런 식으로 국가의 행정 서비스를 특정 기업에 위탁하게 되면서 국가와 특정 기업이 상호의존성을 띠게 된다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술했듯 포털의 검색순위 조작 및 뉴스를 우선 노출하는 알고리즘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논쟁거리다. 20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8년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한 <포털 3법>을 발의했다.

이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포털사이트에 자동화된 원칙에 의한 기사 배열만을 허용할 것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 및 회계를 투명화할 것 ▲언론

사가 위탁한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역외규정을 명문화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할 것 등 내용을 담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정보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정보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할 것 ▲이용자가 정보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 법안 발의는 업계는 물론 연합 뉴스를 통해 여러 언론이 인용할 만큼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통과되진 못했다. 오늘도 여전히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털 문제를 도마에 올려놓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이 문제는 모두에게 숙제다. 왜 우리의 포털은 구글처럼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

이제 인류에게는 AI라는 좋은 무기도 생긴 시점에 말이다. 포털 이외에도 거래 중개, 배달 대행 플랫폼의 문제

도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할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다. 동네 식당이나 중국집, 피자·김밥집 같은 소규모 음식점체에서 중개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에만 의존하다 보니 배달앱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지 않아도 박한 이익을 배달앱 수수료로 내다보니 수익은 외려 전만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중개 배달앱을 통해 주문되는 서비스는 건당 판매 가격의 15%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2-3개의 특정 기업이 과점한 중개 배달앱 시장 구조를 법과 제도를 통해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 상거래가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일종의 사회적 SOC로 취급해 규제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의원생활 4년의 자량!

과학기술혁신본부 창설을 주도! 대한민국의 R&D 예산은 2023년 기준 25조 9천억 원에 달한다. 내가 20대 국회의원을 하던 2016년엔 일반 회계 14조, 여기에 특별 회계와 기금까지 합해도 19조였

던 것과 비교하면 발전이다.

약 26조에 달하는 국가 R&D 사업은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총괄한다. 과기정통부 1, 2차관과는 별도로 본부라는 이름을 쓰지만 본부장은 차관급이다. 과기정통부 조직도를 봐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 2차관과 함께 사실상 3차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어디나 그렇듯 한국의 관료 사회도 각 부처 간 알력

이나 힘겨루기가 상당하다.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과기부 산하의 과학기술 정책본부가 과학기술 정책 및 국가 R&D 사업의 방향을 잡으면,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였다.

과기부가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국가R&D를 선정하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 과학기술 R&D는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 많고, 요즘의 AI처럼 갑자기 중점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과기부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서 전형적인 문·이과 사이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종종 발생했다. 기재부 관료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구주제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부분에 즉각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게 과학기술 R&D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직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내 자란을 하자면, 2017년 예결특위 위원 시절, 기

재부 장관에게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창설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얻어냈다. 사실 혁신본부 창설은 당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예상하다시피 기재부 그리고 국회 기재위의 자기 이익 챙기기 반대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과학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기재부 장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 낸 뒤, 혁신본부 창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을 거듭했다. 당시 신용현 의원, 오세정 의원 등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대 국회 4년간의 의원 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이 뭐냐 묻는다면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창설하는데 맨 앞에 서서 일익을 담당했다고 말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과학기술 진흥 의지가 뚜렷했다. 모두가 밥을

끓던 1959년 국가 원자력원이 처음 생겼다.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벌어진, 지금 생각하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으며 한국 과학기술사에 뿌려진 가장 거대한 씨앗 중 하나였다. 한국의 현대사는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두 거인에 의해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 정책 또한 마찬가지였다. 1962년 경제기획원(당시엔 부흥부라고 불렀다.) 이 생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드디어 과학기술 예산이 독립된 항목으로 국가 예산에 기재되고 관련 통계도 작성되기 시작했다.

1966년 KIST가 생겼고, 1967년에는 정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처가 탄생했다. 1972년에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심의위가 설치돼 총리실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가 박정희 시대의 성과라면, 그다음의 도약은 김대중이 이어받을 차례다.

IMF 구제금융의 와

중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과학기술 중에서도 정보통신의 시대가 될 것을 예견했다. 정보고속도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깔렸으며, 갑자기 전 국민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다.

누가 이 나라가 자력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줄 알았으며, AI 컴퓨팅의 핵심이라는 HBM 메모리를 거의 독점 생산하는 국가가 될 거라 상상했을까.

우리의 번영은 과학에서 비롯됐다. 과거 우리는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는 신기전을 개발했지만, 세종시대를 끝으로 과학기술을 천시한 결과 결국 임진왜란과 두 호란, 그리고 일본 식민지라는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다.

언제든 자랑스레 말할 수 있다. 내가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창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노라고!

To Infinity, and Beyond!

2023년 8월 23일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달의 남극에 착륙했다. 달의 남극 착륙은 앞서 일본과 러시아가 실패한 상태에서 나온 쾌거로 인도는 이로써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참고로 인도는 2014년 화성궤도선 망갈라얀의 발사에도 성공, 아시아에서 최초로 화성에 궤도 위성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기도 했다.

뉴스를 보면서 부러웠다. 정말 부러웠다.

우주 경쟁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주로 가는 길은 과학기술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국가안보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주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현재 우주 경쟁은, 15세기 대항해 시대 초기와 비견된다.

대항해 시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는 선진국이 됐고, 유럽이 세계로 나갈 때 문을 뚫고 잠갔던 아시아는 오랜 기간 수난을 겪었다. 우주 개발은 사실상 인류가 맞이한 두 번째 대항해 시대다. 그 시절에서 누군가는 바다의 끝으로 가면 괴물이,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다.

실패확율이 도처에 깔린 그런 도박에 돈을 쓰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도 했다.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는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항해 연구소를 만들었다. 바다의 가능성을 먼저 간파한 용감한 이들이 오늘의 세계를 만들었듯, 우주로 나가는 나라가 결국 미래의 세계를 만들 거라 확신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만시지탄, 솔직히 늦은 감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첫발을 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행인 건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빠른 속도로 우주 강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있다. 1992년 남의 나라 로켓에 실려 우주로 갔지만, 2013년에 순 우리 기술로 만든 나로호를 우주로 띄워보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목표는 이미 로드맵이 나왔다.

2030년까지 저궤도 8톤 이상, 중궤도 3톤 이상의 발사체를 완성하고, 2040년이 되면 저궤도는 15~20톤, 정지궤도로는 5~6톤을 실어 나르는 발사체를 만드는 것이다.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203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35년까지 소행성 샘플귀환선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세계 10대 우주 강국 안에 들어있다. 하지만 세상은 대부분 1, 2, 3등을 기억하지 10위 안에 누가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대항해 시대 때도 기억되는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등 4개국 정도다.

10대 강국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2022년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는 1

톤 이상의 페이로드를 우주 궤도에 올린 세계 일곱 번째 국가에 등극했다.

내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다. 한국의 우주개발은 무척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의 우주개발은 아직 미진하다. 이 부분에 있어 가장 발이 빠른 건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우주위원회'를 20년 만에 재설치했고, 2019년 12월 20일 우주군을 공식 창설했다. 목표도 명확하다. 우주전쟁을 대비하고, 인공위성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주한미군에도 우주군이 SPACEFOR-KOR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어 있다. 현재 미 우주군의 숫자는 약 8천 명이다.

미국과 함께 우주군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다. 심지어 창설 연도도 미국보다 빠른 2001년이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라는 평가에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며

2015년부터는 공군에 편입. 공군 예하부대로 전략해 버렸다.

영국은 2021년 합동 우주사령부 사령부를 창설했고, 프랑스는 2020년 프랑스 공군의 명칭을 프랑스 항공 우주군으로 개칭한 상태다. 가장 가까운 일본을 보자. 일본은 2020년 우주작전대를 창설했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재편하는 게 목표다. 참고로 일본은 적성국의 위성을 식별해 파괴하는 킬러 위성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는 이런 상황이다. 두 번째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 이제 탐사와 함께 우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2022년 합동참모본부가 군사 우주과의 신설을 발표했고, 공군에는 우주항공작전 대대가 창설했다. 이제 합참에 하나의 과, 공군의 대대 정도가 생긴 수준이다. 나는 2019년 제 1회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에 정치

인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불과 4년 전인 2019년만 해도 아무도 이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웠냐 묻는다면 난 영광이라 답할 것이다. 실제 내 마음이 그렇다. 우주군으로 가는 첫 번째 민-군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건 내 인생의 훈장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당시 연설한 내용이다.

"올해 최초로 열린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멋진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준식 공군 참모 차장님과 임철호 항우연 원장님, 이형목 천문연 원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을 제패한 공군이 올해 창군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대표 우주기관인 항우연, 천문연과 공동으로 민군 우주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진정한 민군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세계 각국은 우주조약에서 정의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과 '우주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써 어떠한 국가도 우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넘어서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주를 국가의 핵심축으로 설정하여 다방면으로 우주개발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학적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안보차원의 우주개발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저는 민과 군이 협력하여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위성사업과 무기체계사업 등을 통해 민과 군에서 각각 우주개발과 관련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축적해 왔으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국내 위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위성

체의 제작 및 시험과 관련한 인프라와 노하우, 인공위성의 운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통해 독자적인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내 인공위성 발사장 건설 등을 통해 우주개발 관련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군은 항공기 등 무기체계에서 사용하는 레이다, 광학, 적외선 센서 등 군에 필요한 센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아울러 항공기의 연구개발과 같은 대형무기 체계사업을 통해 체계통합 및 시험평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개발을 통해 발사체와 관련된 기초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과 군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보유하되, 우주 개발사업은 국가가 통일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민군 기술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 민과 군이 보유한 생산 및 시험시설, 위성 발사장과

같은 인프라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며 신규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연구 인력 및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보분야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재정비입니다. 현재 우주 관련 법률은 과기정통부 소관의 『우주개발 진흥법』과 「우주손해배상법」 산업부 소관의 『항공 우주 산업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모두 우주를 과학적 탐구 영역이자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적에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적인 법률적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주개발진흥법』은 국가의 우주관련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로써, 위성개발사업을 포함한 모든 국가적 차원의 우주개발 사업은 과기부가 총괄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통해 볼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민관군이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각각 부통령과 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우주개발 기구를 신설하여 우주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도 보다 큰 차원에서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의 이름은 비크람이다. 인도의 우주개발에 한 획을 그은,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언젠가, 작은 위성 하나에라도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꿈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는 늘 우주로 향한 내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To Infinity, and Beyond!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자주국방의 첫걸음

2017년 1월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ICBM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약간이라도 기우뚱하는 그 순간을 정말 잘 포착한다. 북한 ICBM을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대응책이 있어야 할 텐데, 대한민국에게는 중대한 외교적 제약이 하나 있었다.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여 수용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RMG, Revised Missile Guideline 그것이었다.

1978년 한·미 관계는 최악이었다. 미국의 카터정부는 인권외교를 주창했다. 유신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검토하고 있

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대응하겠다고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계획, 이름하여 '백곰 사업'을 추진한다. 당시 미국은 이러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즉 백곰사업을 핵을 투사하기 위한 발사체의 연장으로 봤다.

외교 문제를 넘어 군사, 그리고 동맹간 신뢰문제로까지 비화됐다. 결국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CIA 등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결국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보내고 말았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스스로 미사일 개발 제한을 서약한 외교적 복종 서약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 이후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미사일·우주 발사체 개발의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 지침 때문에 약 40여 년간 우리는 주권 침해는 물론 군사 정찰용 드론과 같은 무인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산업까지 제약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낱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반세기가 되도록 연구용 우주 발사체와 고체연료, 드론 등과 같은 항공우주산업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셈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상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 발사체는 처음부터 액체연료로 개발해야 했다.

누리호 설계 당시 이런 제약이 없었다면 지금쯤 누리호의 성능은 훨씬 개선되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과 시간이 더 절약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 강대국을 모두 자극하는 일인건 분명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만을 원하는 그들은 한국이 그저 북한 방어에나 급급한 육군 대국으로만 남길 바랬다.

물론 그 사이 개정 노력도 있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김대중-빌 클린턴 정부 때 사거리 170km가 300km로 연장됐고, 이명박-오바마 정부 때 800km로 늘어났다. 하지만 군사용 무인정찰기, 고체연료 보조 로켓 등 여러 제약은 여전히 있었고, 800km라는 제한도, 제한임에는 틀림없었다. 낡아빠진 1970년대의 협정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 수는 없었다. 상황에 맞게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는 게 정치인의 의무다.

2017년 동료의원들과 함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RMG, Revised Missile Guideline)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차원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주장한 것은 내가 처음이었다. 결의안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나 법규가 아니며, 책임 있는 양국 대표

가 서명한 공

식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 자체로 중대한 주권 포기였다. 엄격히 따지면 대통령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 모두가 주권을 지켜내는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니, 사실상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대표 발의한 결의안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양국 간 공식적인 서명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한국의 자발적 정책 선언이 지금까지 이어져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실제로 미사일 지침은 국제협약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도 없다.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결의안 2017-8-31 발의자 김경진·주승용·최경환·신용현·최명길·이찬열·김중로·김종희·윤영일·

김삼화·유성엽·박주선·정동영·박지원·김동철·장병완·조배숙·장정숙·이동섭·이언주·박주현·김성식·정인화·최도자·이태규·송기석 의원(26인)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하에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굴욕적인 한미미사일지침 재개정 논의를 규탄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상 당연히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사외교적 구속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방위 주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과 함께 이를 미국 정부에 즉각 통보하길 촉구한다. .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억제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 능력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항공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 이유 과거 군사 정권의 부당한 목적으로 탄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과 비행체 개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최대 걸림돌이었음. 또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미사일과 같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되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임. 이에 대통령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과 함께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통보를 촉구함. 이 결의안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시금석이 됐다.

정부는 2020년 사거리 800km 문제를 군사용 고체 로켓만으로 제한하는 개정에 성공했고, 2021년 급기야 지침 자체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제 이론적으로 한국은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즉 MRBM까지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더불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및 대기권 재돌입 기술만 추가하면 ICBM도 가질 수 있게 됐다.

당시 폐지 결의안을 낼 때, 한국 진보정당의 상징과도 같은 모모 의원은 이 결의안이 한미간 쓸데 없는

불확만 조장하는 행동 아니냐며 불참을 통보했다. 반미 자주화 운동이 정치의 밑천 중 하나이며 말끝마다 미국으로부터의 전작권 회수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서 나온 말이라 믿기 힘들었다. 그는 끝끝내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자,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시점에서 능동적 평화 형성 전략을 논했다. 한국의 우주기술이 하늘로 오른다. 이제는 고체 연료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우주 대항해 시대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그 일에 벽돌 하나쯤 엮었다. 정치를 하는 보람이란 이런 것이다.

문제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니 평소에 궁금하거나 만나고 싶던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궁금한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해야 하는 성격의 나에게 이걸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였다.

전문가와 의사결정권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보니 배우는 것이 많았고, 의정 활동 내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남들보다는 꽤 많은 경험을 해봤다고 자부하지만, 입법은 내가 생각하는 복잡계의 차원을 넘는 일이 많았다. 일견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했던 것 중 그 문제

를 고쳤을 경우, 생각하지도 않은 지점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세상사는 결코 한 방향도, 일원적이지도 않았다.

입법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창조라기보다, 사회의 온갖 이해관계를 이어 붙여가며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을 찾아 나서는 '조율'에 가까웠다. 따라서 한쪽 전문가의 이야기만 경청해서는 안 된다. 동쪽에는 동쪽의 문제가 서쪽에는 서쪽의 문제가 있다. 열심히 관련 있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골조 공사부터 시작해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누수가 있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흔히 생긴다. 다들 이쯤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정치인이 남보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과방위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수백억 원이 투자하여 구매한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 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 우습지

만 이런 경우가 정부 예산사업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모 과학기술원을 방문했다 현장 연구원으로부터 들은 하소연을 기초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제야 과기정통부는 고가장비에 대해 별도의 관리 인력과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틈새예산을 세운 덕분에 수많은 연구기관들은 장비 유지비와 인력에 대한 고민 없이, 깊이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의 일이다. 화웨이 한국지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했는데, 중국산 장비를 통해 우리의 정보가 비밀리에 넘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사장을 상대로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납품 관련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보안 인증 등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사장은 "한국 정부 또는 한국거래처가 원하는 보안

인증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했다. 재차 추궁했다.

“한국 쪽에서 보안 검증을 위해 5G

장비 설계도나 소스 코드를 제출하라고 하면 수용할 생각이나” 질문했다. 이에 지사장은, “소스 코드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지만, 요청이 있으면, 제3자나 경쟁 업체에 공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제서야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5G 통신 장비에 대한 8개월 간의 점검에 들어갔다. 화웨이로 인한 마·중 갈등이 촉발되기 몇 년 전의 일이었다. 국회의원의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했기에 가능한 결과이기도 했다.

헬로 구글, 헤이 애플, 귀라이 화웨이

삼성 현대 같은 국내 대기업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엄중하지만, 다국적 기업에는 잣대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본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글로벌 기업, 예컨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우리 기업들만 감시의 대상이 된다. 역차별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 페이스북, 화

웨이의 한국 책임자를 국감장에 불렀다. 나는 이미 2017년부터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규제할 수 있는 국내법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 (Contents Provider)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이나 사회공헌 등, 그에 준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 CP들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었다.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지만,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들로 준비했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 포기이기도 하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MS 등 6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 스토어, 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었다. 이 회사들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업에 확장해 활용하는 게 금지되며, 자사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다.

조직적인 위반행위 발생 시 EU집행위가 해당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내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가짜뉴스가 시끄럽게 한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뀐다. 십수년 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현재 마트는 하향산업이다. 인터넷을 통해 신선식품이 당일 배송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정치권은 늘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봤다. 변화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일차원적인 단순 입법으로 대응하기에만 급급했다. 세상 변하는 속도를 따라갈 국회의원도 필요한 이유다.

전체 목차 보기

3장 세계는 넓었고, 배울 것은 많았다

전체 목차 보기

세계로 뻗는 의원외교

지구상에 204개의 국가가 있다. UN 회원국이 193개, 옵저버 국가 2개국이다. 나머지 9개는 UN 미승인 국가다. 각 나라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제가 존재한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국가의 정치가 얼마나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해법을 내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 해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명운이 갈리곤 한다.

국회의원은 늘 국가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국내에 답이 없다면 해외 유사사례에서 찾

아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새로운 창조적인 길을 만들어야 한다. 과기부는 매년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 한인과학자들을 한데 모아 상호교류의 장인 '과학기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학술대회에 맞춰 한인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매개로 국가 간 상호 연구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탐색하는 의원외교를 펼친다. 2017년에 방문한 '2017 한·캐나다 과학기술 학술대회'(Canada-Korea Conference, CKC-2017)와 '2017 한·미국 과학기술 학술대회'(US-Korea Conference, UKC-2017)도 그런 기회였다.

당시 7회째 맞은 CKC-2017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과총)와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공동주최로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그해 5월 한-캐나다 과학 기술혁신협력 협정이 발효된 시점이라 분위기가 좋았다. '미래를 위한 과학 기술 혁신협력'이란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19회째를 맞은 UKC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과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키워드로 '협력'을 선택했다. 과총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국연구재단,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가 힘을 보태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러시아와 독일 인도 출장길에도 올랐다. 러시아는 당시만 해도 한국에 로켓 발사 기술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였다.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했던 러시아의 과학기술은 놀라웠다. 각 분야별 기초과학 역량에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독일에서는 IT:SW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눈에 띄었다. 인도에서는 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공위성 발사기술에 대한 현황조사를 벌였다.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를 찾아 인도 우주 기술의 수준과 국제협력 현황을 파악했고, 향후 한·인도간 우주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원자로 파손에 관한 우려가 한창이던 시절이라 인도 원전의 재난 예방 시스템도 궁금했다. 인도의 원자력행정 관리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청(DAE)을 방문해, 그들의 준비상황을 살펴본 부분은 유의미했다. 인도는 선진국만큼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인력에 의존했지만, 몇몇 기술은 인도 특유의 주가드 정신을 발휘해 발상의 전환을 이루며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도 중요하다. 현지의 삼성전자 연구소, 기타 우리 기업들은 공장부지 매입 문제에 있어서 인도 특유의 관료주의적 난맥과 충분하지 않은 항공노선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상황에 맞춰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출장 중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항상 하는

일이 있다. 얼마간의 자유시간이 생기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그 도시의 속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단 몇 시간이라도 꼭 혼자 돌아본다. 국회의원 자격의 해외 방문은 어떤 면에서는 양쪽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다. 방문국에서도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고, 이건 한국 공관도 마찬가지다. 이런 배려(?)로 인해 그 나라

의 날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사람들이 가는 거리 속으로 들어간다. 땅을 딛고 똑같은 눈높이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속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여전히 배낭을 메고 맨땅을 밟는다. 답은 현장에, 스승은 길 위에 있다.

북유럽에서

명불허전! 역시 복지는 북유럽이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 이유는 복지 강국의 현장에서 보다 심도 있게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스웨덴 학술재단의 인가를 받아 복지·교육을 연구하는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저출산만큼이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양끝단의 인구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한국이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큰 인상을 남겼다.

집에서 모실수 있을 때까지 모시다가 요양시설로 가는 것이 최근 한국의 추세라면, 스웨덴은 정반대다. 1992년까지는 요양시설이 보편적이었고, 최근에는 자가 요양이 스웨덴의 표준방침이다. 스웨덴은 1992년 에델 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는 병원, 복지 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던 복지전달체계를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했다.

“나이는 질병이 아니며, 노인이 돼도 삶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옳다. ‘는게 스웨덴 노인 복지의 핵심 화두다. 스웨덴의 경우 6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재가요양을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전문가가 방문해 가사·청소·산책·요리를 삶에 있어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준다.

비용은 최고 2125크로나, 한국 돈 월3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실비아 홈’ 왕립 치매지원센터’는 스웨덴의 자랑 중 하나다. 실비아는 스웨덴 왕비의 이름인데,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치매로 고통받는걸 보면서 치매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경험이 결국 왕립 치매지원센터로 이어졌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가구회사 이케아는 ‘실비아 보’라는 치매 환자 맞춤형 주거단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치매 환자를 요양시설에 따로 집중시키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주택의 인테리어부터 가구까지 모두 이케아가 설계했다고 한다. 부부가 같이 살다 한 쪽이 치매가 걸려 요양소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두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난다. 이케아는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침대와 가구를 어찌 설계하는 게 안전한지, 집안의 동선을 어찌 배치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 연구를 거듭했다고 한다.

스웨덴도 스웨덴이지만, 기업의 사회 기여 측면에서도 이케아의 행보는 꽤나 인상적이었다.

내 지역구인 동대문구 보건소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2008년 경희의료원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작해 15년째에 이른다. 치매는 사실상 가족이 그 증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없는 갈등과 불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가족 교육이 다른 질병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치매는 완치가 없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다행히 2020년대 들어 유전자 기술을 이용한 치매·알츠하이머 신약이 하나둘 출시되고 있다. 미국 FDA는 2021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헬름을 승인했고 경쟁 신약도 2023년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인류의 치매 정복에도 한걸음 바짝 다가선 형국이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정책연구소인 시비타 (CIVITA)도 방문했다. 노르웨이 복지의 3요소(경제 모델, 삼자협력모델, 복지정책)를 포함해 노동과 삶의 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곳이다. 노르웨이 노동부차관은

노동시장정책, 근로환경정책, 연금정책, 복지사회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세계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변화는 날마다 곳곳에서 일어난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변화에 대한 예민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도 해야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비교해 본 것이, 아이디어의 근원인 듯하다.

인도로 가는 길

검사 시절, 발리우드라고 통칭되는 인도영화의 독특한 매력에 빠진 적이 있다. 영화 중간중간 독특한 군무가 포함된 뮤지컬적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매료된 것이다. 이후 알고 보니 한국에서만 인도영화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 나름 전 세계적으로 인도영화 팬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제작 편수에 있어서는 할리우드를 능가하고, 아시아 일부와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영화를 보다 보니 영화 속 언어도 궁금해졌다. 당시 천안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을 땐데, 수소문해

보니 천안에 인도 유학생이 있었고, 그를 개인 교사로 고용해 인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인 힌디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 인도인 유학생으로서는 자국 말을 배우겠다는 괴짜 공무원으로 인해 약간의 학비를 벌충할 수 있어 좋았고, 나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내 일반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 이후 의원 시절 인도를 방문하면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외려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잘 몰랐지만, 들어보면 흥미를 가져볼 만한 한국과 인도 간의 비교 연결점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인도도 한국의 훈민정음처럼 고유의 문자 체계가 있다. 이 문자 체계를 '데바나가리'라고 하는데, 놀라운 점은 이 데바나가리는 훈민정음처럼 자음과 모음이 존재하고, 자모의 결합을 통해 소리글자를 만들어내고, 소리글자가 일정한 의미와 연계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데바나가리가 훈민정음에 비해 훨씬 앞선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가장 큰 공헌을 한 신숙주는 명나라를 오가며 음운을 연구했으며, 신숙주 본인이 중국·일본·몽골어·여진

어를 두루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목해 볼 대상은 몽골어와 여진어다.

이 글자들은 표음문자에 속하는데, 이 언어의 바탕이 된 게 티베트어다. 참고로 티베트는 원래 문자가 없던 나라였으나 7세기 티베트를 지배한 송첸캄포 왕에 의해 '불경을 번역하기 위한 용도'로 문자가 창제된다. 이 경우도 특이한 경우다.

조선처럼 왕이 나서서 문자를 창제해 보급한 경우니 말이다. 당시 티베트는 히말라야 너머 인도의 데바나가리를 기반으로 문자시스템을 만들었다. 즉, 인도→티베트→몽골→여진·파스파 문자로의 이동선이 그려진다는 말이다.

조선 성종 대에 공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성현은, 그의 책 용재총화에서 글자모양은 인도 범어를 본
으

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두 문자 간의 구조적인 몇 가지 동일성을 봤을 때 다소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우리 고유한 문화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 로마, 당, 페르시아, 몽골을 거치면서 과거로부터 생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며 퍼져 나갔다. 남의 생각을 이어받아 더 위대한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류역사의 보편적 모습이다.

두 번째 두 나라의 공통점은 광복절이 8월 15일로 같은 날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이 기점이고, 인도는 1947년 8월 15일이 기점이다. 우리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바로 그날인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삼는다. 인도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집권당이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바뀌며 영국의 식민지 정책 변화와 인도인의 독립 열망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독립이다. 영국과 인도는 합의하에 식민 지배를 종료했고, 1947년 8월 15일

영국에서 신생 인도로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르지만, 독립기념일이 같은 이유는 흔치 않아 인도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강조하면 무척 놀라곤 한다.

세 번째 공통점은 분단국가라는 점이다. 우리는 미·소의 분할 점령의 결과로 타의에 의해 분단을 당했고,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 내내 종교적 갈등이 촉발되며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합의하여 분단된 경우이다. 인도는 자의에 의한 분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분단 과정이 평탄하진 않았다.

한국이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한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산가족이었던 것처럼, 인도도 인도와 파키스탄 분단을 거치며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1400만 명이고, 이 와중에 무려 100만 명이 죽었다. 자의건 타의건 분단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애꿎게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큼은 한국과 인도는 각각 비슷한 상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극의 역사로 인해 두 나라 공히 분단 시

기를 그린 상흔 문학이 존재한다.

두 나라는 상당한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란 같은 경험이나 취미,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같으면 호감을 느끼게 된다. 인도의 세기가 시작된다는 이때, 이 정도만 알아도 처음 보는 인도인과 눈빛을 교환하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인도와의 교류를 위한 한-인도 친선협회가 있긴 하지만,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다. 2023년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전 세계가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인도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쩌면 다시없을 기회를 이렇게 날리는 건 아닐까? 한국-인도 간의 새로운 교류 협력의 시대가 오길 꿈꾼다.

병령사로 가는 배 위에서

검사 시절, 교환연구검사로 중국에 6개월간 머문 일이 있었다. 상하이에 있었는데, 인적교류 차원이 아니라 상해지역 경찰, 검사, 법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정도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었다. 그 덕분에 틈틈이 중국 여기저기를 주유할 수 있었다.

역사책에서 배웠던, 삼국지부터 무협지까지 그 모든 문학장르 속에 들어있던 그 중원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교환검사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가겠다고 지원한 것도 이런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이었다.

당시는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집권하던 시대였다. 외국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고, 저렴한 호텔도 개방돼 배낭여행이 가능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요즘 중국 여행은 그 시절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오악이라 불리는 다섯 개의 중국 산은 언제나 중국 문화에 대한 영감을 주는 보고로 알려져 있다. 공자가 “태산이 높다 하되 그래봐야 하늘 아래 있다”고 한 그 태산은 실제 가보니 고도 자체는 높지 않아 1,533m에 불과했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태백산 등 한국의 산보다 낮았지만, 중국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만큼.

산 곳곳은 그야말로 거대한 문화재였다. 특히, 태산은 석각 전시장이라 할 정도로 산 곳곳의 바위에 글을 새긴 석각들이 즐비하다. 태산 정상에만 석각이 258개, 산 전체를 합치면 대략 비석 800, 마애석각 1000여개라고 한다.

당 태종 이세민이나 청제국의 황제인 강희, 건륭제의 석각도 있고, 이백같은 시인의 문장도 있고, 역사엔 비록 이름을

을 남기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한 줄 시원하게 쓰고 간 무명 선비의 글도 많았다. 석각만 봐도 몇 날 며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석각의 비문들은 읽을 만했고, 어떤 글은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생각의 꼬리를 물게 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석각 중 하나는 타이산이 속해있는 타이안부의 한 관리가 썼다는 여국 함녕 與國威이라는 네 글자였다. 모두 힘을 합쳐 나라를 안녕케 한다는 뜻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새겨야 할 구절이 아닐까 싶다.

중국에서 인상 깊었던 다른 곳 중 하나는, 실크로드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감숙성이었던 것 같다. 방치되다시피 했던 탓에 오히려 더 잘 보존되어 지금도 웅장함을 뽐내고 있는 병령사 석굴군은 내 중국여행 사상 최고의 원픽이었다. 중국의 석굴하면 둔황, 운강, 용문을 꼽는다. 모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원체 유명한

탓에 모두 관광지가 되어버렸고, 문화혁명 시기 한차례 파괴가 휩쓸고 간 탓에, 대부분 현재 새로 복원한 것들이다. 하지만 병령사는 지금도 보트를 타고 2-4시간을 가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보트 선착장에서 두 시간.

댐이 생기기 전에도 이 일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에 가까웠다. 병령사 석굴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이 일대, 즉 실크로드의 구간 중 하나인 하서주랑 일대가 당시 얼마나 국제적인 지역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벽화 안에는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놀라웠다. 지금 중국 최대의 국제도시라는 상하이도 못한 성과를 그 옛날 이뤄냈단 말이니 말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외 개방정책을 펼칠 때 부강했다.

당 제국은 실크로드 동서 교역로와 대운하를 통해 국제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했으며, 몽골족의 원나라는 유라시아 단일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청 제국 또한 남쪽의 광저우를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확대를 꾀했다.

현시점에,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너무 빨리 욕심을 드러내며 제국의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의 제국은 민주주의도, 인권도, 아량도 모두 부족하다. 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중국이 제공한 약탈적 부채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민주화의 길로 갈 거라 막연히 낙관하던 국가들은 이제 중국의 욕심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채, 고슴도치처럼 껍썩 숨고 있다. 관대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청산이 바로 저기인 것을.

국제 정세는 정해진 진리는 없다. 국내 정치만큼이나 살아 꿈틀거리고, 합종과 연횡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개방된 나라들과 한 편에 서 있다. 우리가 이룩한 이 번영은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역사상 화려했던 중화 문명을 존

경하지만, 작금의 중국 문명은 세계 속에 책임을 다하기에는 관용과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전체 목차 보기

4장 입법 투쟁기

전체 목차 보기

불법 콜택시 타다와 맞서다

특정한 물건, 재화에 대한 소유를 전제로 경제가 성립한다. 소유한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기 차량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 차를 24시간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내 물건이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필요한 제삼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세상에 이롭지 않을까?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재화나 물건을 이용하도록 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자원고갈을 막자는 개념이다. 훌륭한 생각이고, 이대로 된다면 세상은 더 효율적이 될 것 같다.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미국 법학자 로런스 레식이 그의 저서

리믹스 Remix에 처음 사용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꿈은 예쁘다. 문제는 그 예쁜 꿈에, 인간의 탐욕이라는 현실을 대입하면, 그 꿈은 대부분 악몽이 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들이 예쁜 꿈을 몰라서 콘크리트의 무채색 건물로, 이 세상을 건설한 건 아니다. 문제는 현실.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은 갈수록 치솟는다. 이 상황에서 모두가 비교적 안녕하게 살아가려면 예쁘장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손해 보는 사람이 적은, 합의될 수 있는 무채색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17년 10월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라는 이름의 택시 서비스가 시작됐다. 타다는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환영했다. 기존 택시의 불편했던 점. 예컨대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고 운행하는 문제, 차 안 냄새, 정치적인 의사표현, 혹은

불쾌한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일거에 해결했기 때문이다. 타다는 편리함과 쾌적함의 대명사가 됐다. 그 덕분에 타다는 고속 성장을 했다. 서비스 1년 만에 가입자 125만 명을 확보했다.

소비자는 선호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었다. 타다 드라이버(운전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정식 노동자가 아니라, 매일 타다 회사에서 차를 배차받아야 했고, 만약 배차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타다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는, 매일 새벽 인력시장 노동자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날 태운 승객의 별점 평가가 낮으면, 다음날부터 바로 영업을 해야 할 운전용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고, 해고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임금을 받는 일당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보니, 노동법상의 산재보험, 직장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매일 해고 불안에 떨면서 운전하는 극히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면, 직전 5년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범죄 등 전과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타다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일반 운전면허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 택시관련 법규를 조용히 파괴해 버린 것이다.

타다가 실내 공간이 쾌적하고, 운전자가 승객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장점은 있었지만, 택시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 그리고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이 타다였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보편화될 경우 언제라도 폭탄으로 변할 수 있는 허술한 서비스였던 것이다. 타다는 택시와 달리 성범죄 경력조회 같은 다중을 상대로 서비스 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인적 체크조차 거치지 않았다.

그저 2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업무에 투입됐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연

결되면서 상거래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과 요소를 고려해서 만든 기존의 제도를, 인터넷 상거래 도입에 따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오히려 과거 시스템의 장점을 없애 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 혹은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보호장치를 없애버리고 모든게 가능해지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카카오 카풀도 그랬다. 공유경제라는 수식어를 달고 출발했지만, 근로자와 대중을 위한 여러 안전망을 없애버린 점에서는 타다와 같은 구조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아름다움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었고, 그저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파괴해서 돈을 버는데 급급한, 저급한 사업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사이 택시업계와 타다 혹은 카카오 카풀 등과 같은 사업자와의 갈등의 골만 점점 더 깊어져갔다. 그

지지부진함 속에서 택시기사 세 분이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카카오의 행태가 결국 소상공인인 회사 혹은 개인의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아니 이걸 이 상황을 방기한 정치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지만, 우리는 점점 갈수록 비겁해지고 있다. 나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를 일종의 약탈이자 플랫폼을 자처했을 뿐 본질은 포획 경제일 뿐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이른바 '공유경제'라는 것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 같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 카풀은 플랫폼 중개인임을 자처했을 뿐, 노동착취, 사회안전망 제거라는 측면에서 매우 나빴다. 공유경제를 표방했지만, 실질은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파괴하는 '약탈경제'였다.

카카오 카풀뿐만 아니다. 공유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성범죄, 절도,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탈세, 불법 영업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국민 개인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촘촘한 소방법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이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만든 규제가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이 돈을 내고 자는 공공숙박업 공간이 갖춰야 할 꼼꼼한 안전사항일 뿐이다. 다종의 사람이 이용해야 하기에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보다 호텔, 모텔 여관 등의 경우에는 소방, 위생법률상 더 촘촘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유숙소라는 명목으로 개인주택, 오피스텔을 가지고 호텔 모텔 영업을 한다면 이러한 대중을 위한 보호장치가 깨져 버리는 것이다. 숙칭 '공유'라는 이름 하의 상당수 숙소가 일반 주택으로, 정식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각종 위생, 화재 및 재난 안전관리, 소비자 사생활 보호 등의 법적 의무 없이, 이런저런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공유경제라는 명목의 우버,

아파트 숙박 공유 시스템은 인터넷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 플랫폼 운영 주체는 대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이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선의의 중계자임을 자처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 플랫폼 운영 기업만 배를 불리는 구조였던 셈이다.

‘공유’라는 그럴듯한 명칭으로 탄생한 ICT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4차 산업 혁명의 신성장동력,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거둬 밝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경제라 칭하는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기술도, 혁신 기술도 아니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포탈 업체들이 영세 산업을 잠식하고 수수료를 착취하는 구조일 뿐이다. 그저 수많은 국내법과 상충하는 편법 서비스에 불과하다. 제발 더디 가더라도, 상식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걸맞는 길을 가길 바란다.

참고로 2023년 6월 대법원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기사 딸린 렌터카’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다. 결론적으로 타다 측은 형사처벌만 면한 것이 됐을 뿐이다. 나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갑자기 떠밀려 가는 일만큼은 막고자 한다. 그게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의 억울함을 보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운,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입법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문명이 동물 세계와 다른 점은 결과에 따라 차등은 둘 수 있지만, 설사 경쟁에서 밀렸다 해도 방치하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뛰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굳이 애써 이렇게 빛나는 문명을 구축할 이유가 없다. 적자생존은 정글의 법칙이지 인간세계의 법칙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쉽다. 계층 상위에 있을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소연할 수 있는 인맥과 방법도 많은

법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쉽지 않다. 잘나가는 사람이야 한, 두 다리 건너면 기자, 의사, 법조인이 가득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조차 만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이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이유다.

로마만 봐도 귀족정 일색의 정치를 보완하기 위해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민관 제도를 뒀다. 이게 로마가 우리보다 더 온정적이라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다.

모든 국가는 흥망성쇠를 겪기 마련이다.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쇠하고 결국 소멸한다. 국가가 망하는 경우는 잘 살펴보면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 외적 요인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해 망하는 것이고 내적 요인은 거의 대부분 내분이다. 내분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한다. 요즘 말로 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들이 유

량민화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는 세금이 안 걷히니 더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 스스로 망하거나 이 틈을 노린 외부의 침입에 의해 망한다. 조선 후기가 그랬고, 청 제국 말기가 그랬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그 갈등을 근대화로 돌파하면서 넘긴 특이한 사례다.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트리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우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공동체의 안정성, 그리고 번영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 살지 않으면, 번영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역사는 항상, 왕조와 국가가 망할 때마다 말해주지만, 우리는 매번 못 알아듣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국회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할애해 왔다. 가난한 농민

의 아들로 태어난 나의 근본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들이 목숨 걸고 저항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냉혹한 시대에 카카오 카풀과 타다의 불법을 파헤친 것도, 학대받는 아이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 것도,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낸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사회적 약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이게끔 노력했던 일이다. 요즘은 정보접근성이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국가의 복지 정책조차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복지가 제공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의 가계 통신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지원 대상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일은 의미 있는 노력에서 그쳤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데, 이전소득 항목에 '양육비'가 포함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양육비를 받게 되면 수급권을 잃게 되어, 오히려 양육비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배려 없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은 때로는 가혹하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그 경우였다.

한부모 가족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가 지급되지만 이 또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 지원을 신청하려 해도 양육비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중위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양육비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입법도 미완인 상태로 남아있다.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를 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이 법으로 혜택을 볼 수많은 사람들의 눈망울을 그려보지만, 모든 꿈들을 다 보듬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늘 죄송스럽다.

빈틈을 메꿔가며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2019년 이전만 해도 만 19세, 2005년 이전에는 만 20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했었다.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권 투쟁이라도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거권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느냐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로 봤다. 여성의 선거권만 해도 우리는 제헌헌법부터 보장했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위스조차 70년대나 돼서야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했다.

이 선거행위, 정치 참여에서 소외되는 유일한 국민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다. 국회의원

이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의도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없는 존재의 정책은 항상 중요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아동, 청소년 정책이라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의 관심이 더 많이 개입된다.

검사 시절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다루면서 느낀 문제의식도 이 부분이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국민들은 공분하지만, 이게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엄청난 사회적 비극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다. 나는 재임 시절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보호와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었다. 현행법상 학대 아동의 보호자나 가족이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이들은 누군가 데려가지 않으면 스스로 병원이나 심리센터를 가지 못한다.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검사 시절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이 법률의 보완이 필요해 보였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 그나마 검사 시절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이, 그 사이 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피해 아동의 상담이나 치료 위탁 명령을 내릴 수는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가 이뤄진 건수는 단 1명, 총 5회 교육에 불과했다. 곧바로 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기관이 피해 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 등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 법률은 '모든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이익의 최종 종착점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피해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진 않는다. 내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의 참여'를 구체화했었다.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보호 등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검사 시절 범죄자를 잡고 그들을 교도소에 보냈지만, 홀로 남겨진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보며 참 가슴이 아팠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지만 그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는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 문제도 다시 살피었다. 여전히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의 상당수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심지어 부모의 체포 과정을 그대로 지켜본 어린 아이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국에는 14만여 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었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만 5만 4천 명에 달했다. 이에 교도소장 등이 신입 수용자들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의 요청 시 보호조치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 최종적으로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용자들의 어린

자녀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여성 수용자의 경우만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미성년 자녀의 접견이 가능하고, 남성 수용자들은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양성의 책임과 권한에서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모든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따뜻한 장소에서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 법이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은 수용소의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눈을 맞추며 사랑으로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다. 수용자 자녀들이 접견 때만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다.

지난 2018년, 언론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다. 소아당뇨병 자녀의 치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의료 기기를 해외 직접 구매해 개조한 엔지니어 출신 어머니가 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해당 어머니는 다행히 기소유예가 되긴 했지만,

현행법상 이런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인치료, 임상시험, 연구개발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인증·신고 를 면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판매·임대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 기기와 그 부속품에 대해서, 그 수입허가·인증·신고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 대체 재가 없어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법 체계의 미비함으로 인해 범법자의 굴레를 안겨줘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결국 통과되진 못했다. 식약처는 단지 문제가 된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허가 면제 의료기기로 등록하는 조치를 취해 해당 건에 대해서만 면피를 해버렸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신약,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법이, 시스템이 좀 더 빨리 여기에 따라야 할 필요성은 커져만 간다.

전체 목차 보기

5장 동대문 개조계획

전체 목차 보기

동대문 개조계획

청량리 그랜드 바자르

동대문에는 20여 곳의 전통 시장이 있다. 청량리역 주변만 해도 청량리 종합시장과 경동시장을 비롯해 8개의 전통시장이 몰려있다. 가락동에 농수산 청과 시장이 생기기 전까지 청량리는 서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었고, 건너편 약령시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전통 약재만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청량리 일대에 이렇게 거대 시장이 생겨난 계기는 1964년. 경춘선과 중앙선이 개통되며 서울 근교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청량리 일대가 부각되면서부터다. 당시만 해도 개별 보따리상들이 많던 시절이라 팔

도를 떠돌던 상인들이 청량리로 몰려들었다. 예전에는 남양주에서 발원한 홍릉천이 청량리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었는데, 홍릉천을 1970년대 복개하면서 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밀집된 가게들이 하나로 통합되며 한 번 더 시장이 거대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형마트, 쿠팡, 홈쇼핑이 아무리 대세라고는 해도,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약령시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농수산-청과는 마트 최저가가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마트보다 풍부한 청량리 시장의 품목 다양성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모로코의 마라케시 자마 엘프나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특이한 곳이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배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시장은 광장이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벼룩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고, 먹거리가 발달해 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자마 엘프나처럼 재편한 시장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오키나와 나하 제1공설시

장이다. 나하 제1공설시장은 노우렌 시장과 함께 나하의 부엌이라 불릴 정도로 시민들의 식재를 공급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구조도 골목과 골목이 이어진 청량리 전통시장과 흡사하다. 이런 외국의 시장과 우리 청량리 시장들을 비교해 생각해 보았다.

현대의 전통시장은 시장의 역할과 함께 관광지의 역할을 한다. 이 차이가 뭐냐면 과거의 전통시장은 식재를 파는 곳이었다. 시장에서 식재를 사가서 집에서 해 먹는다. 관광지로서의 시장은 그 안에서 미식 경험과 쇼핑, 여가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 이 케이스로 성공한 곳이 광장시장이다. 지역민이야 시장에서 먹는다 해도 대중적인 끼니 음식을 찾게 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일종의 특산음식이나, 일대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맛집을 찾게 된다. 혹은 청량리와 별 맥락이 없다 해도 근사한 것을 먹고 싶어 한다. 한국인에게야 아니 이 음식과 청량리가 무슨 상관 이 있담!이라고 할지 모르나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청

량리에서 맛보는 모든 요리들이 신기하다. 즉 관참은 한식 레스토랑을 시장 내에 입점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시장 내 관참은 식당을 발굴해 식당에 얹힌 이야기를 엮고-스토리텔링- 그곳의 상징성을 매칭시켜야 한다.

나하의 제1공설시장은 오키나와에서 맛볼 수 있는 온갖 요리를 망라하고 있다. 단순히 일본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회뿐만 아니라 생선 버터구이, 오키나와 스타일의 정식, 로컬 간식까지. 그곳에서 관광객은 시장의 정취를 즐기고 소비한다. 당연히 시장 외곽에는 아픈 다리를 쉬어갈 수 있는 카페를

구성해야 한다.

터키의 그랜드 바자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시장이다. 한때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오스만 제국의 영광과 함께한 국제적 명성을 지닌 시장이었다. 우리 역사가 안타까운 점이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을 거치며 이런 역사성을 지닌 곳이 다 부서졌다. 엄밀히 말해 종로 육시가 살아남았다면 역사성의 측면에서 그랜드 바자르처럼 꾸미기에 적당했을 것 같지만, 피맛골도 철거해 버리다 보니 요원한 일. 규모로만 본다면 청량리 일대의 시장을 단일 디자인과 인테리어 그리고 통합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엮어버리면 그랜드 바자르와 꽤 흡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 형식과 나하 제1공설시장의 형식을 가미하는 방법 말이다.

이게 바로 '그랜드 청량 마켓몰' 구상이다. 아이디어대로만 된다면 청량리 일대는 대한민국 최대의 전통시장군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베이징의 왕푸징 야시나, 상하이의 난징동루, 혹은 타이의 짜뚜짝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키워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동대문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필형 구청장이 꿈꾸는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 재선되면 총력 지원할 생각이다.

모든 길은 청량리로 통한다

동대문구의 지명은 "동대문"에서 연원했지만, 현재 동대문은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실질 중심은 동대문이 아니라 청량리역과 그 주변이다. 청량리역은 경기 동북부와 강원도와 이어지는 철도역이다. 역이 생기고 사람이 모이면서 자연스레 청량리 일대의 수많은 시장들이 생겨났다. 청평, 가평, 춘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량리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80년대 말, 마이카 시대가 자리 잡으면서 청량리 일대는 교통의 메카라는 위치를 점점 상실해 갔다. 그나마 80~90년대의 청량리는, 경기도나 강원도 교외로 MT를 떠나는 대학생이 빈자리를 매꿨다. 매년 학

기초가 되면 청량리에는 MT장비를 가득 든 대학생들이 가득했다. 그렇다면 사람이 찾는 동대문구를 복원하는 비결도 바로 교통망의 재건이 아닐까?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그리고 KTX가 연결된다. 먼저 하루 9편 운행하는, 그저 구색맞추기에 가까운 분당선 운행 편수를 늘려야 한다. 하루 몇 편뿐인 운행 횟수 때문에 경의중앙선 우회열차를 타고 왕십리까지 갔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이 수도 없이 많다. 분당선과의 선로연결은 이제까지 서울의 동부로만 확장을 거듭하던 청량리와 동대문구 일대가 경기남부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수서발 SRT도 청량리를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청량리로 SRT가 연결되면 서울 철도교통의 허브는 서울역 1강 체제에서 서울역-청량리의 2강 체제로 바뀐다. 여기에 GTX B, C 노선도 연결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와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에서 끝나는 B노선과 의정부를 출발해 동탄까지 연결되는 C 구간이 모두 청량리를 경유한다. 대한민국의 3개의 신통한 노선들이 청량리를 경유한다고 말해야 맞다. 여기에 강북권 도심끼리 연결하는 경전철인 면목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청량리는 서울 교통의 최종심지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렇게 교차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떠들 수 있는 가장 핵심 공간이 바로 청량리판 그랜드 바자르 계획인 것이다. 이 현장을 지켜볼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는 건 정치인으로서도 무한

한 영광인 셈이다. 동대문구 Forever!

약령시 전통문화도 이제는 불거리인 시대

신농은 중국신화에 등장한다. 사람 몸뚱이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농사의 아버지라고 한다. 모든 풀과 열매, 버섯을 직접 맛보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는 것인지를 판별해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농경의 기틀을 만들었다. 어느 날은 하룻동안 백 가지 독초를 먹고 힘들게 누워있다가, 향긋한 잎사귀 하나를 발견해 씹었는데, 백 가지 독이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이게 바로 차 켄의 시작이다.

신농 숭배는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한자 문화권에

두루 영향을 미쳤고 농사의 신으로 신봉됐다. 한국에서도 신라시대부터 신농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시대에는 왕이 직접 선농단에서 신농에게 제사를 지냈고, 몸소 밭을 갈았다고 한다. 신농과 선농은 함께 쓰는 표기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신농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왕이 시범을 보이는 농경은 백성에게 보이는 일종의 본이었다. 그래서 선농단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면 왕은 직접 밭을 갈았고, 참고로 왕비는 경작에 해당하는 여자의 의무인 양잠 시범을 보여야 했다. 대한제국 말기까지 행해지던 선농단 행사는, 일본 식민지 시절을 거치며 멈추게 되는데, 대한제국 황실이 해산되며 제사를 지낼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선농단 제사는 왕과 하늘의 소통이라 여겨졌기에, 왕이 아닌 이는 제사를 거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숭한 역사적 질곡 속에서도 선농단 제단은 살아남았다. 1979년 제기동의 뜻있는 어르신들이 나서 선농단에서 자발적인 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동대문구에서 제를 올리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요즘은 이런 역사 어린 행사 하나하나가 불거리인 시대가 되었고 선농제향도 사람들이 찾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농제향의 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전통 놀이, 의복 체험 그리고 전통 설령탕 재현이다. 설령탕은 기원이 다소 엇갈리긴 하는데, 가장 주류 의견 중 하나는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끓여 먹던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동대문구만의 설령탕 특화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다. 동대문구는 인근 마장동과 연계해 있기 때문에 품질 좋은 소고기를 확보하기에도 유리하고, 이미 앞에서 기술한 대로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있다.

약령시도 선농단과 연계가 가능하다. 전술했듯 신농씨는 100가지 독을 하루에 맛본 후 괴로워하다 차를 발견했다. 지금이야 차가 기호식품으로 소비되지만 초창기에는 약용식물로 소비됐다.

실제 약으로 처방되기도 했는데, 이는 동서양 모두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차보다는 커피 문화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차 기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농단과 약령시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바로 차일 수 있다.

현재 한국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 만한, 혹은 온갖 종류의 차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찾집 거리의 건설은 그랜드 바자르-선농단-약령시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어차피 한국 차만으로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거리 형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컨셉은 동서양이 만나는 그랜드 바자르다. 유럽인들의 가향차와 인도의 밀크티, 중국의 8대 명차, 그리고 구수한 한국의 작설과 일본의 말차까지 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앞서 청

량리를 개척한 스타벅스 경동 1960과도 좋은 대구를 이룬다. 문화재가 돈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도 옛말이다. 동대문구는 이야기와 이야기를 엮어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제는 그런 시대다.

전체 목차 보기

6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전체 목차 보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인구절벽의 대한민국 2023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기록을 또 갱신할 모양이다. 합계 출산율 0.7명이 아니라, 0.6명대에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정도의 초저출산율은 인류가 생긴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다. 한때 우리는 일본의 저출산율을 비웃으며 일본 소멸을 생각했지만,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500만 명에, 합계 출산율은 1.3명 정도로 몇 년째 안정되어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우리의 두 배에 가깝다. 그동안 우리 집에 불난 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에 빠져있었던 셈이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소멸될 1호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무려 17년 전 예측이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사교육 억제를 꼽았다

한국 정부는 판단이 둔했다. 1984년부터 저출산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가서야 산아제한정책을 철회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기조의 관성을 막을 대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 결과가 오늘이다.

저출산이 초래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다. 어지간한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다. 전쟁이나 자연재앙은 끝나는 즉시 곧바로 자연 회복력을 보인다. 사실 이 회복력이 인류 사회를 지탱한 근본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인구소멸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 중이고, 회복력이라는 근원적 힘 자체를 소실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장병완 전 기획처 장관이 '저출산은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까지 했을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한다. 사실 고령화는 많은 나라가 겪는 문제이긴 하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고령화는 그 추세가 완만하다.

즉 사회가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는 말이다. 유럽도 고령화 고령화 했지만 초고령화 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50~100년이 걸렸고 덕분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다. 대책을 수립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이다.

한동안 망한다고 했던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36년이 걸렸다. 한국은 2000년 고령사회로 진

입한 이래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아니 한국은 대체 뭐 이렇게 모든 게 빠른지!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5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해보자. 2020년 한국의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약 3,700만 명이다.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가 지금보다 천만이 줄 2,853만 명, 30년 뒤인 2070년이 되면 1,730만 명으로 감소한다. 물론 이때는 총인구도 3,100만 명이 돼 1969년 수준으로 회귀한다.

당연히 생산 인구가 줄고, 부양할 노인인구가 많아지게 된다. 2020년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 인구는 22명이었었지만, 2050년이 되면 80명이 된다. 즉 100명이 일하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80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여기에 유소년 부양까지 더하면 1명 생산해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가능하기는 할까?

아니 생산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제일 긴 나라다. 현재 한국의 기대수명은 83세지만 조만간 90세로 늘어난다. 의료비가 급증한다. 모든 사람은 평생 지출할 의료비의 절반이 70세가 넘어 발생한다. 이런 인구가 2020년 350만 명에서 2050년 1,200만 명이 된다.

연금은? 건강보험은? 모두 지속 가능할까? 세수가 없는데 말이다. 복지에 드는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국회 정책 예산처가 예상한 데이터를 보면 현재의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생산인구 1인당 조세 부담액은 1,000만 원 가량이지만, 2040년이 되면 3,000만 원에 달하게 된다. 20년 만에 세배를 부담해야 한다. 이게 향후 꾸준히 2%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다는 상황에서 가정한 가장 낙관적인 예상이다.

지방소멸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17년 이미 229개

시군구 중 83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47년이 되면 전국이 소멸 위험지역이 된다. 68%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47년이 되면 서울의 종로, 성동, 중랑, 은평, 서초, 강서, 송파, 동대문이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되고, 2067년이 되면 서울만 15개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든다. 국가 소멸이라는 말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실존하는, 그것도 명확히 눈에 보이는 위험인 셈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벚꽃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찾아온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20년 전부터 있었다. 생존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앞으로 30여 년이 지나면 지방대학의 80%가 폐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명확한 현실이 되었다.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은 10년 전보다 약 10% 감소했는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오히려 1% 정도 미세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 소재 대학은 17%, 전남도 지역 대학은 16%, 경북도 지역 대학은 15% 충남과 전북도 대학의 입학생은 평균 14%가 감소했다. 코로나 팬더믹을 통과한 2023년 상황은 더 심각하

다. 고3 학생 수는 40만 명이 붕괴해 39만 8,721명이다. 2022년 고3 학생이 43만 명이었으니 1년 사이에 3만 명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4년제 일반대가 34만 4,296명 등 총 51만 884명이다. 올 고 3학생보다 무려 11만 2,613명 분의 자리가 남는다. 입시업계 말에 따르면 재수생을 합쳐도 대입 정원대비 수능 응시자가 4만 명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지인 중 지방대학 교수가 여럿 있다. 학생 모집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고3 학생, 고3 담임, 입시관련 업무 선생님들에게 학생 모집을 부탁하곤 한단다. 필요하면 상품권, 선물 등을 준비해서 찾아가기도 한다. 교수들이 고등학교 교무실을 자주 찾다 보니 귀찮아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수 출입금지’ 팻말을 걸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교수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동병상련의 눈빛으로 반겨준다고 한다. 왜 상황이 반전되었을까? 이제 지방고등학교도 상황이 대학과 비슷해

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학생 모집을 위해서 중학교를 뛰어다녀야 한다. 고등학교도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단 말이다. 전남 담양에 창평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다. 내가 10여 년 전 지인의 요청을 받아 특강을 간 적이 있었다. 전교생이 21명이었는데 교직원은 24명이었다. 이미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았다. 저출산이 지방만의 문제라고? 아니다. 2023년 2월, 유동 인구 많기로 유명한 건대 입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폐교했다. 서울 한복판에 전교생이 84명. 서울에서 학생 부족으로 폐교한 학교는 화양초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0년 염강초와 공진중도 폐교했다.

지방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부정과 범죄가 생기기도 한다. 산업체전형을 악용하여 직장인이 아닌 사람까지 서류를 위조하여 입학시켰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다. 심지어 유명 학생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최소한의 외관을 만들어 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학의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폐교하는 지방대학이 늘수록 학생들의 소비로 연명하는 지방 도시의 경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군 입대 자원 감소로 인한 군부대 통폐합, 그리고 대학의 폐교는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대학이 폐교하면 교수·교직원도 실업자가 된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공부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 주변에 상가 하숙집 등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전문대학은 19개, 모두 지방 사립대학이다.

교육계에서는 국가가 학교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통폐합을 확대해 지방대 폐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충남대와 한밭대 등이 통폐합을 했거나 통합논의가 진행 중이

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전남대-여수대, 그리고 강원대와 삼척대,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의 경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설립자에게 재정적으로 후퇴의 여지를 주고, 사회적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회생을 지원한다.

그 모든 논의 앞서,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대학 폐교는 당연한가? 국가는 폐교와 통폐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이 가야 하는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의 상상력과 국가의 집단지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다수의 지방대학 교직자는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지방대학 폐교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왜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을까? 일반적인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리 배커의 합리적 선택론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뛰어난 자질의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도 비례해서 커진다고 한다. 그래서 다자녀 = 총 양육비용의 상승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수의 자녀를 낳아 자녀의 질을 높이기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게, 한국의 경우 부모 양쪽의 수입이 안정적인 세종시와 같은 곳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력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KDI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성 임금이 10% 올라가면 아이 낳을 확률이 2.5% 감소하고, 둘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2.

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10% 오를 경우 둘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3.2%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미혼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미혼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30대 남성은 50.

8%, 여성은 33.6%가 미혼이다. 이는 1990년 30대 남성의 9.

5%, 여성의 4.1%가 미혼인데 비해 거의 5~8배가 증가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취업난, 주택난 등 주로 경제환경의 절박함으로 인해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사라졌고, 연애 한다 해도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결혼 후 부부가 한, 두 명의 자녀를 낳는 데 그치는 현 상황에서 결혼 건수 감소는 출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결혼연령의 상승은 부부의 자녀출산에 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 이내에만 자녀를 낳으려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면 초산 연령도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이 잘되지 않는다. 높은 초산 연령은 여성이 자녀를 추가로 갖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생물학적 요인은 결국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결혼은 출산과 관련이 깊으며 최근 결혼건수의 감소와 초혼 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건 사회 연구원의 2018년 자료를 보면 혼인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 차를 엿볼 수 있다. 22~44세의 미혼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 직업, 소득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여성은 배우자의 직업, 소득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었다. 2021년 대학 진학율을 보자. 남성은 76.8%, 여성은 81.6%다. 명문대 진학율에 있어서도 남녀 간 격차는 이제 없다. 특히나 여성들이 취업 시험에 강점을 보이며 9급 공무원 합격자

의 60%가 여성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여성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위의 남성을 찾는데, 이 조건에 맞는 남성은 점점 줄고 있다. 미스매칭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협업을 통해 가정경제를 완성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고, 능력 있는 젊은이는 심리적 외로움만 극복한다면 경제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 만들어졌다. 즉, 결혼을 선택하는 대신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법적 부담이 없는 동거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있다.

이런 추세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원인이고, 결국 출산율 저하, 대한민국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로마의 멸망은 인구감소에서 시작됐다

인구감소는 제국도 멸망시킨다.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는 철저한 순혈주의 국가였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스파르타 시민들로만 구성된 군인의 숫자가 감소했고, 이어진 테베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사라졌다. 반면 로마는 혈통을 따지지 않았다. 혈연주의에 집착하지 않았고, 속주 출신이라해도 시민권만 있으면 동등한 로마시민으로 대우했다. 심지어 속주 출신 황제도 여럿 있었다. 이런 포용을 바탕으로 로마는 번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구 기반을 만들었다. 전성기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유럽-중동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했

으며, 콘스탄티노플에 건설된 동로마는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천 년 이상 지속했다.

로마는 인구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국가 중 하나다. 성경에서 보는 예수의 탄생도 인구조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게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인구 통계는 파피루스를 통해 남아 있는데, 1세기~2세기 사이 로마 제국의 인구는 약 5,900~7,900만으로 추산된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산이 필수적이었다. 영유아 사망률을 고려하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생률은 최고 4.5~6.

5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제국 번성기에는, 한 가정에 아이가 열 명이나 되는 집안이 흔했을 정도라고 한다. 황금기인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로마의 인구는 최대 8000만에서 1억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제국의 위력은 그 본질이 인구에 있었다.

인구가 제국 번영의 최소 필요조건임을 깨달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출산장려정책을 법제화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신세를 부과했다. 20세~60세 남자, 20세~50세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독신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물렸다.

독신으로 50세가 넘으면, 재산을 상속하거나 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공직자를 뽑을 때에도 능력이 비슷하다면 다자녀가구에 우선적인 선발과 승진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서로마가 망할 시점에는 인구가 5,000만 명 정도로 줄어 있었다.

로마 본국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출산 기피 풍조가 그 원인이었다. 목욕탕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넉넉하고 행복한 삶은 출산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지 않았다. 그때의 로마도 오늘의 대한민국처럼 경제성장→저출산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말기로 갈수록 로마제국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력이 제대로 공급될 수 없었다. 전쟁할 수 있는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국 전성기에는 정복 전쟁으로 영토가 팽창하고, 정복지를 통해 노예들이 공급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졌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자, 로마시민권자로 구성된 로마군의 숫자와 전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제국의 확장이 멈춰서고 노예 공급도 중단되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제국의 확장이 멈춰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로마영토의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여러 방면에서 재정 악화 징후가 뚜렷했다.

출산율 감소 → 시민권자 감소 → 군인감소 → 전쟁불가로 노예 충원 불가 → 제국 유지 부담 증가 → 복지 감당 어려움 → 로마멸망. 이런 순서로 악순환의 경로를 따라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구 저하는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전성기에는 한 집안에서 열 명의 자녀가 태어나던 것이, 쇠퇴기에는 젊은 층의 혼인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고, 자녀 출산은 결혼자의 절반,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 한 명을 출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로마멸망의 근본 원인을, 또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합계출산율이 두 명을 넘는 비교적 넉넉한 상황이지만,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모여드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시민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역시 합계출산율이 2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개방 이민정책과 난민 수용정책으로 보완한다. 두 국가 모두 젊고 유능한 생산가능인구를 계속해서 해외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매년 충원하고 있는 것이다.

1,500년 전의 로마 멸망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30년 후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헝가리 방식의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미국과 독일 방식의 외국인 청년 수혈을 통한 국적 개방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그저 역사의 새벽하늘에 짧은 시간 반짝이다 소멸할지도 모른다.

국적법 개정안과 동방의 등불

2021년 나는 국적법 개정안을 냈다. 찬성만큼 반대 여론도 많았다. 현실적 필요성과 반외국인 정서가 격돌했다.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턱을 넘어서진 못했다. 왜 나는 폭풍의 중심에 설 것을 알면서 국적법 개정안을 냈던 걸까? 이번 챕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에 이른다. 이중 장기 체류 외국인이 170만 명이고, 유학생은 20만 명이다. 마지막으로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은 18만 명에 이른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이들의 고향은 한국이다. 한국어로 소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

외모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한국의 여느 어린이, 청소년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은 사고를 공유하는 우리 시대의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개별적으로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다. 하여 부모가 한국 영주권을 가진 상태인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에 한해 국적 취득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이들을 한국 사회로 편입시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도 컸다.

2019년에는 외국 국적의 우수인재를 위한 간이 귀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도 냈던 적이 있다. 귀화요건 대상자에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 국적 인재를 포함시켰다. 한국은 우리가 원컨 혹은 원치않건 이미 선진국이다.

과거의 표현으로 바꾸면 제국주의 초입이란 말이 된다. 지금의 시대는 타국의 영토를 물리적으로 침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익을 수탈하지 않는다. 그게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른 인류의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와 문화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결국 선진국이란 다른 나라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라다. 제국, 요즘 말로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문호가 열려 있다.

압도적인 군사, 경제, 문화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문을 활짝 열어 외래의 사상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내 것을 만든다. 그렇게 다른 문화조차 내 것으로 만드는 와중에 국가는 성장하고 자라나며 위대해진다.

멀리 로마나 미국까지 갈 것도 없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당나라 시절이 그랬다. 한쪽만으로 이루어진 송과 명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현재 충청 이남의 대학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의 차이일 뿐 이미 몰락해 가고 있다. 대학이 망하면 대학 주변 생태계가 붕괴한다. 식당과 원룸과 마트가 동시에 몰락한다. 여기에 교직원과 교수진도 실직 상태에 빠진다. 결국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라도 지방 대학의 몰락을 막아야 하며, 한국에서 키운 이들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저개발 국가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차피 한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한 친구들은 임금이 저렴한 그들의 본국으로 갈 마음은 없을 테니 말이다. 한국이 임금도 높은 데다 복지를 비롯한 제반 환경도 그들의 본국에 비해 훨씬 낫다. 이들에게 무상 대학교육을 시킨다면, 연 1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3천만 원. 즉 연간 3조 정도가 든다. 이미 우리는 해외 ODA 사업 중 교육 분야에만 연간 3~4천억을 쓰고 있다.

두 번째 이들이 한국에서 학위를 땀을 경우 영주가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신변의 불안함 없이 매년 비자 갱신의 두려움 없이 한국 생활에 몰두할 수 있다. 이들이 소비하고, 노동하고, 아이 낳고 결국 이들의 세금으로 나라 살림이 굴러간다. 이는 결코 손해나는 투자가 아니다.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이들에게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위 과정을 한국에서 지냈고, 여기서 노동하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즉 이들은 각각 자기 나라에서 한국 물건을 판매하는 도·소매상이 되거나, 바이어가 된다. 나라마다 발전 과정은 비슷하다. 우리가 거쳤던 과정 그대로 그들도 동일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자전거 타다 오토바이 타고, 경차 타고, 배기량이 늘어나는 게 우리네 삶이었고, 나아가 그들의 미래다. 한국에서 한국의 삶을 산 이들이 본국에서 가면 한국에

서 바라본 앞선 안목으로 그 사회를 선도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접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 물건을 파는 현지인들 상당수는 한국에서의 체류 경험이 있다. 사람은 경험을 활용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과 우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친한파 집단을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걸 프로젝트 '동방의 등불'이라고 명명했다. 동방의 등불 프로젝트가 현실화할 것인지는 나의 의지와 대한민국 국민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인도인에 주목해보자

세계적인 탈중국 기조 속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인도다.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보니 시장으로서도, 공장으로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떠오른다. 게다가 인

도 인력은 검증됐다. 오늘날 인도 인력 없이 돌아가는 실리콘 밸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를 비롯해 MS, IBM같은 IT기업, 패션기업인 샤넬의 최고 경영자도 인도계다. 영국의 총리, 미국의 부통령이 인도계니 국제정치에서도 인도인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왜 중국인이나 기타 아시아인에 비해 인도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상류사회로 안착이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이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의 자유를 꼽는데, 의원 시절 방문한 인도에서 들은 영어는 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인도 전용 지역 언어 느낌이었다. 물론 발음과 어법이 다르지만 영어가 공용어 중 하나니 영어를 학교에서만 배우는 우리에게 비해 영미권에서 적응이 빠르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말이다.

모든 국가에서 상류사회 진입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그 공동체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껏 기술 가르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더니 조국이 부른다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인적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사람인지를 먼저 살핀다. 이 점에서 인도인들은 꽤 훌륭한데, 인도인들은 정착 국가에서 간첩 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없다. 이걸

미국 국적을 가진 상황에서도 모국을 위해 기밀을 빼돌리다 걸려 종종 뉴스에 나오는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국이나 중국인은 국가 공동체를 통해 정체성을 부여받는 구조인데 비해 인도는 이런 정서가 비교적 열다. 한국이나 중국이 고래로 내려온 국가공동체의 의미가 큰데 비해, 인도인에게 인도라는 말은 지명에 가까운 개념이다. 원래 인도라는 말은 오늘날의 이란, 과거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인더스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호칭이었다.

즉 애초부터 지리적 개념에서 시작됐다. 게다가 인도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 달리 통일 국가를 이룬 역사가 짧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할거했다.

오죽하면 현재의 인도 공화국이 인도가 만든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말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 애국심이 주요 가치인 동아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분열적이고 애국심이 열은 것처럼 보

인다. 올 초 인도 매체 한 곳이 인도 유학생에게 졸업 후 인도로 돌아올 것이냐는 설문을 돌린 적이 있었다. 결과는 놀라운 정도. 인도로 돌아오겠다는 인도인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를 다시 설문하자, 유학생들은 인도의 열악한 환경, 여성과 아이에게 불리한 사회구조, 취약한 의료복지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인도인들은 어디든 자신의 대우를 해준다면 이주할 의사가 있다.

한국은 서구 국가에 비해 언어적으로는 불리하다. 하지만 서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훌륭한 치안과 의료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도인들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는 대부분의 니즈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단 이야기다.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적은, 세계적인 천재들이 많지 않은 곳에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 거주 외국인 통계를 봐도 인도인들은 블루칼라가 거의 없다. 모두 전문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노자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집단이란 이야기다.

이런 인도 인력에 대해서 먼저 눈독을 들인 건 일본이다. 도쿄의 에도가와구 江江는 거주 인도인만 4,000명에 달하는, 일본 거주 인도인의 10%가 모여 사는 지역이다. 참고로 에도가와구 인구의 25%가 인도인이기도 하다!

일본에 인도인 인력이 몰리기 시작한 건 1,999년, 지금이야 웃어넘길 일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2,000년에 접어들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는 Y2K 문제가 발생해 대혼란이 올 거라 믿었다. 단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일본 정부가 Y2K로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호소카와 모리키로 당시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 인도 IT인력의 비자 발급을 대폭 완화해 주면서 도쿄로 일본 IT 인력이 몰려들게 된다. 참고로 인도인 러쉬가 있기 전인 1990년대 에도가와구내 인도인은 단 58명뿐이었다고.

에도가와구는 금융기관 본사가 몰려있는 오테마치 大手町, 일본증권거래소가 있는 니혼바시 日本橋와 환승 없이 접근 가능한 이른바 교통의 요지인데다 당

시 신흥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곳이라 부동산 임대료도 도쿄 시내에 비해서는 꽤 저렴한 편이었다고 한다.

인도의 전문 인력들은 커리어를 위해 일본을 거치는 곳쯤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아예 모든 인도인 가족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 결과 '글로벌 인디언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국제학교를 만들었다고 한다. 즉 인도인 기술자들이 그들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먼저 만든 셈이다.

그것도 인도 특유의 영재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채로 말이다. 효과는 있었다. 훨씬 좋은 사회적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매리트다.

현재 에도가와구의 인도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두 개다. 그만큼 그 사이 유입이 더 늘었던 말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들을 진정한 국제인으로 키우고 싶은 일본 부모들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현재는 국제학교 학생 중 40%가 일본인, 나머지가 인도인이

라고 한다. 일본은 우리가 모르는 새 이미 여기까지 가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몰입, 차원이 다른 인구감소 대책

인간이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감각에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을까? 측정해 보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개울가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계속 들어 본다고 가정해보자. 스톱워치를 손에 들고 청각으로 개울물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스톱워치를 눌러놓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개울물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깨달는 바로 그 순간 스톱워치 종료 버튼을 누른다. 하나의 감각이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지속 시간이 어렴풋이 측정된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길어야 3분, 5분이 넘어서면 정

말로 훌륭한 집중력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 한 시간의 수업시간 중 진짜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되며 도중의 상당 시간을 잡념에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손으로 쓰고 입으로 소리 내 읽는 공부방식을 권고하기도 한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거 선불교에서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일할 때 일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다'라고 했다. 인간의 인생으로 보면, 사람은 약 50년간 일을 하고 사는데, 그중에 1/3은 잠, 1/3은 휴식 그리고 1/3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일하는 시간 중에도 집중력의 비율을 대입하면, 한 인간이 진짜로 일하는 순정 업무(학습)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에 정말로 일에 집중 몰입해서 하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진짜로 공부에 몰입해서 하면, 우리 삶의 효율성이 훨씬 순정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결국 있는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게 유일한 상수일지도 모른다.

급격한 인구감소의 시대에 유능한 외국인들을 유입시키는 것과 더불어 이 시간 집중법 몰입이 우리 삶에 보편화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기술과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요즘 내가 주목하는 방향이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쓴 '몰입'이라는 영역이다. 시간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몰입' 기법을 통해 전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이야기다.

사실 한국인들은 압축성장의 주인공이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위대하다는 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황농문 교수가 주장하는 몰입의 핵심은 골똥히 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스킬을 연마하자는 것이다.

어떤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생산력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가 발휘된

다. 우리에게 답은 주어져했는데, 그 답을 실천하는 게 현대인으로서는 꽤나 어렵다는 것이, 주어진 과제인 것 같다.

전체 목차 보기

닫는글

전체 목차 보기

인간은 존엄하다. 헌법전문에도 기재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다만 존엄의 구체적인 형태 내용은 시대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노르웨이, 미국, 북한, 중국, 리비아 중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삶의 출발점부터 많이 다를 것이다. 한 인간이 살아간 역사적 시간대도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은 대체로 시간 순서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2023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젊은이라면, 비행기로 12시간쯤 날아가 가보았을 유럽 배낭여행을,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

지만 불가능했다. 아마 세종대왕은 유럽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것이다. 그 빠른 몽골기마병들도 카라코룸에서 헝가리까지 말 타고 달려가는데 100일이 넘게 걸렸다.

역사상 과학기술은 쉼 없이 발전해 왔지만, 현대문명의 기초기술은 대부분 1800년대 이후에, 특히 정보컴퓨터 기술은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된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평균 사망 연령이 이제 90세에 접근해 간다. 불과 50년 전인 1970년대 남성 평균수명은 58.

6세, 여성은 65. 6세였다. 의료와 보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40년 만에 평균수명을 30년이나 늘렸다.

전근대 시대 기준으로 보면 한 생을 더 살게 된 셈이다. 한 인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존엄할 수 있는가 여부는, 그가 살다 간 시대의 과학기술의 수준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의 정치경제체제의 유용성에 달려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인류 전반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필수 요소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국방력의 기본도 과학기술에서 비롯된다. 한 발을 장전 발사하는 데 10초가 걸리는 화승총과 6연발 라이플총의 대결은, 이미 그 자체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술 발전을 통해, 정밀 로봇 관절 같은 보조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면, 그래서 이동 장애라는 단어가 무의미해진다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다. 과거에는 좋은 스승을 찾아 이리저리 이사하며 맹모삼천지교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전 국민에게, 원하는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찾아다니는 스승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조금 더 적극적 독학을 해야 한다면 인터넷의 바다로 나가면 된다. 인터넷은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도서관이 되어 주었다. 과학기술이 인간 존엄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과학기술 상임위에서 4년 내내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를 유도해 내어 대한민국

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 다만 ‘타다’처럼 혁신 기술이 아니면서, 이미 잘 만들어진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집단에 대해서는 서민 보호의 호민관으로서 엄중한 철퇴를 내릴 것임도 분명히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도 따라오지 못하는 공공의료 시스템, 안전한 치안, 정보통신기술, 대통령 탄핵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전이 발생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의 틀 안에서 해결해 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 열을 바탕으로 이 같은 문명의 성취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드높은 성취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인구기구와 석학들은 저출산 인구문제로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급격한 인구감소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빠르고, 심하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정점일 때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이제 1년에 26만 명이 태어난다. 반면 61세이던 평균 수명은 이제 90세에 육박한다. 연구소에서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젊은 연구 인력들이 어느 시점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다.

군대에서는 매년 현역병 입대자원이 2만 명씩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육군 2개 사단을 매년 줄여가야 한다. 부양받아야 할 고령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납부하고 부양을 할 재원을 마련해 줄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기술 탈취로, 기술격차가 줄어들어 대중국 수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총체적 구조적 난국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없어진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2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싶다. 태어나는 절대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 아이들 모두를 최고의 역량을 가진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주장하는 ‘몰입학습법’은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몰입학습법을 통해 높은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절대 숫자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의 개혁, 입시 제도의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

이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해외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대한민국으로 유입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일 년 예산이 대략 700조 내외이다.

그 중 대략 3조 정도를 지출해 개도국의 젊은 청년 약 10만 명 정도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무상 교육을 시키자. 과정이 끝난 후 약 70%는 모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30%는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에 잔류할 것이다. 돌아간 70%는 1-20년이 지나면 그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과의 협업의 기회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남는 30%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저출산의 문제점을 일정 정도 보완함과

더불어 부족한 국내 내수 수요 기반도 될 것이다. 이미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방법이다. 우리도 이 좋은 방법을 현재 국력이 가능한 시점에서 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세계 최고의 문명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이전·전파시켜서, 대한민국의 성취가 전 지구촌의 성취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동체 자체의 지속가능성의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치를 통해서 1)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

2) 인구문제라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중대한 문제해결, 3)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의료보험,치안, 행정, 사법 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전 세계에 나누어 주는 시대적 역할을 하고 싶다.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의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해내기만 한다면 그저 흔적뿐인 로마문명, 흔적조차 없는 칭기스칸의 몽골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족적을

인류사에 남기게 될 것이다. 2023. 11. 장안동에서 김경진

전체 목차 보기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